

바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입니다.

현재 역동적으로 진행중에 있는 구체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 (1) 국경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전면적이고도 가속적인 자본의 광역화, 그리고 이에 따른 기존 중심부/준주변부/주변부 관계의 재편 및 재생산
- (2) 이에 따른, 모든 인간 활동의 자본 활동에로의 통합화
- (3) 그 결과 초래되는 자연 환경과 인간 품성의 파괴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사회를 지배하는 유일 최강의 권력으로서의 정치 권력의 지속적인 업존
- (5) 미국의 주도권 쇠퇴
- (6) 사회주의 국가, 특히 소련의 체제 모순 해결 시작
- (7) 일본의 산업·금융 능력의 거대화화 그에 따른 교란요인화

이러한 변화와 함께 기본적으로 미국의 주도권에 기초하고 있는 세계 구조에는 여기저기서 많은 틈새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남북의 좌파를 이간시킨 장애물들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파스 아메리카나 구조에 뿌리를 둔 이상 동요되고 약화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서 역사의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미국의 주도권 쇠퇴가 세계사적 궤적으로 뚜렷이 각인되면서, 앞으로 그 어떤 단일국가도 자본주의 세계 전체의 '평화유지'라는 의무를 자임할 수도 없고 자임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주변부 국가들은 점점 더 통제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 (2) 통신망 등 여러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전세계적 규모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 세계 민중의 잠재 역량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미국의 후원이 있든 없든 각지의 지배 집단이 그동안 자국민에게 행사해 온 철권적 독재가 점점 더 곤란에 봉착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조망을 가지고 그럼 이제부터 (1) 전후 일본의 진보세력과 그 일국 편향적 자세 (2)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남북 연대의 새로운 전망이라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 전후 진보세력과 일국적 편향

1. '평화와 민주주의'

전후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 있어서 일본의 주류 진보세력들은 대체로 협애한 일국적 자세로 반대운동을 계속해 왔는데, 이것은 세계의 주도권력으로서의 미국의 상부구조적 지원을 받으며 일본 자본주의가 효과적으로 수행한 자기중심적 축적양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60년대의 일본을 같은 시기 드폴 치하의 프랑스와 대조함으로써 명료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드폴이 나토로부터의 실질적인 탈퇴로써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했을 때, 일본은 워싱턴측의 월남 정책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식으로 미국을 온순하게 추종했을 따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일본은 아시아의 근린국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조차도 결정권을 주장한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기에 일본 경제는 미국 자본의 별다른 침투

없이 자기중심적인 팽창을 급속하고도 활력넘치게 이룩했던 반면에, 프랑스는 독자 노선을 목청껏 외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경제침투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내부적 결정권과 정치 군사 문제에 대한 외 부적 의존이라는 교묘한 배합은 전후 일본 사회의 역사적으로 특수한 정체로 일컬어졌으며, 통상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라고도 불리워지는데, 현재의 일본 주류진보세력도 그러한 정체의 한 구성요소였던 것입니다.

전후 민주주의는 일본 내부의 좌파에게 특별한 편향들을 드러내게 하였으므로 현재의 맥락에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후 일본의 소위 민주주의 국가는 단일의 합헌적 원칙에 기초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호 배타적인 원칙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1) 평화주의 헌법 (모든 무장력을 불법화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였습니다), (2) 미국과의 군사 동맹 (일-미 안보조약) 을 통한 일본의 군사적, 특히 외교적 제기능의 미국으로의 광범위한 위임 (체제의 안전관 역할 담당) (3) 전전(戰前) 제국(帝國) 과의 은밀하면서도 완강한 연속성 유지 (전쟁의 최고 책임자였던 히로히토 천황이 비록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은 상실하였지만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뚜렷한 상징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나 이념적으로는 일본은 어느 국가와도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민주주의의 전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모순된 원칙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주도권이 전체가 되는 일련의 역사적 정황하에서 장식품에 불과하였습니다.

군사적 기능의 대부분을 미국에 위임함으로써, 일본의 부르조아지와 그들의 정치적 수족인 자민당(自民黨)은 경제건설에 손쉽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민족해방운동이 미국의 반(反)혁명 전략에 직면하고 있었던 포연이 가득한 아시아 상황으로부터 국내 정치를 격리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해 국민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생략됨으로써, 일본의 지배집단들은 경제우선주의(economism)에 의한 통치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전후 민주 세력'(PDF)으로 불리웠던 주류 진보세력은 위와같은 자민당 통치에 대한 반대세력으로 형성되었습니다. PDF는 일본 사회당과 가장 큰 노조연맹체인 총평(總平) (사회당 지지), 및 일본 공산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느슨한 연합을 이루면서 반(反) 자민당 정치 투쟁에 공동 보조를 취하였습니다. 일본 공산당은 약간 다른 노선을 표방하였으나, 전체적으로 PDF "평화와 민주주의"로 표상되는 정치적 가치를 지닌 쟁점들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反) 핵폭탄 운동과 총평(總平) 운동을 포함한 이 시기 대다수의 대중운동들은 이러한 쟁점들을 선포하였고 거기에서 운동의 활력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시각은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평화"는 타국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상관없이 일본만의 평화로서 이해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평화"관은 참혹했던 전쟁 경험을 겪은 일본 인민들이 평화를 이해하는 특수한 방식이 반영되었습니다. 원폭 희생자들을 포함한 수백만의 일본인들이 생명을 잃고 집들이 불태워져야 했던 전쟁은 그들에게 커다란

재앙으로 비추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인식하는 한, 그들이 유사한 재앙을 두려워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제국주의 전략을 추구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수천만의 인민들을 살상했었다는 사실에 대한 뼈아픈 인식이, 그들의 평화관에서는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지는 못했습니다.

히로시마에서의 대량학살은 역사적 문맥에서 벌어졌던 것이며 세계 평화의 추상적이고도 상징적인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쟁의 원인을 사회과학적으로 준별해 내거나 전쟁의 책임에 대한 일반 대중의 비판적 성찰이 자리잡을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평화관은 오히려 제삼세계에 속하는 아시아 지역의 인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일본인들을 더욱 더 맹목으로 몰아가는 역할마저 했었습니다. 전후 민주 체세력에게 '민주주의'는 우선 반동적 안보관계 법령을 도입하려는 자민당의 거듭되는 시도에 대항할 수 있는 투쟁적 가치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의 '평화' 관 인식 수준하에서는, 자민당이 전후 제일세대가 그렇게도 혐오해 마지 않았던 전전(戰前)의 파시스트 통치로 역사의 시계 바늘을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파시스트 통치의 재래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로의 단순한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거제나 의회제와 같은 현존 형태의 민주적 제제도(諸制度)로 귀결되었던 것입니다. 말을 바꾸자면, 이러한 '민주주의' 이해는 기존 질서의 옹호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1960년에 이르기까지, 평화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체세력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전후 일본을 지탱하는 세 지주중의 하나인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전전(戰前) 내각의 각료로서 전범의 일원이었던 기시 노부스케가 수상에 취임하여 미국과의 안보조약 갱신에 나선 그 해에, 수백만의 일본인들은 전후 최대 규모로 대대적인 정치적 반대 운동에 떨쳐 일어섰습니다. 기시가 지닌 이미지는 전전 체제를 상기시켜 주었을 뿐더러 사안 자체가 안보조약이었던 탓에, 대중들은 평화와 민주주의가 지닌 제가치를 재음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대중들 사이에 국제적 연대에 관한 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해 4월, 한국의 학생들은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여 드디어 이승만 독재 체제를 무너뜨렸으나, 일본의 운동세력으로부터는 실질적인 동조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봉기가 일본인 자신들이 대항해서 투쟁하는 미국의 극동군사동맹을 약화시켰음이 분명한데도, 여기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사회당 소속의 한 의원이 일본 소재 군사기지에서 발견된 첩보기(U2기로서 소련 영토에서 격추된 바 있습니다)에 관해 정부측을 몰아 부치면서 그러한 첩보기는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는 오키나와나 한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을 때에도, "평화와 민주주의"로 옹호되는 가치관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이중성은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본토나 그 당시 미국의 군사 점령하의 오키나와나 남한은 모두 미국의 군사 관할하에 놓여 있는 작전 구역들이 분명하고 첩보기의 존재가 위협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그 첩보기는 오키나와

(1972년에 일본 주권하로 반환되었습니다)로 이전되든 한국으로 이전되든 일본인들에게도 역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주류 진보세력의 인식 태도에서는 그러한 명명백백한 사실조차도 증발되어 있었습니다. 주류 진보세력이 그 시야를 국경 너머로 넓히지 못하고 여타 아시아 지역 민중과 공유할 수 있는 대의를 찾지 못하는 태도의 배후에는 앞서 언급한 바 있던 이중적 상부구조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전후의 일본 국가는 미국의 주도권을 체제 내로 유기적으로 통합시키고 있었던 탓에, '평화 헌법'은 국가의 유일한 통치 제도일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탈헌법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자위대(미국 점령하에서 초헌법적 명령으로 창설된)은 이러한 측면을 보여주는 뚜렷한 예입니다. 상호모순적인 "평화 헌법 제도"와 "안보 조약 제도"가, 마치 등뿔이 붙어서 서로를 볼 수 없는 기형의 일란성 쌍생아들처럼, 전체로 융합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상부구조상의 기만성을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 줍니다. 바로 이러한 기만성 때문에 대중들이 '평화 헌법' 제도에 대해 환상을 지닐 여지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환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주류 좌파를 포함한 일반 대중들은 일본 내의 '평화'가 일본 밖의 인민들에 대한 반(反)혁명 전쟁, 독재적 통치 및 그 밖의 억압의 뒷면에 불과하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후 일본의 국체는 제국(帝國) 일본의 유산을 온존시켰습니다. 여타 국가들에서 투쟁하는 형제·자매들에 대한 대중들의 무관심과 무감각이 '평화' 환상을 만연하게 하였으며, 여기에는 인종주의의 뿌리깊은 편견들과 일본현대사를 관통하여 선양되었던 민족적 오만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셈입니다. 일본이 패망한 것은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된 미국에 의해서이지 중국과 조선 및 동남아 민중들의 저항에 의해서가 아니었다고 대중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일본중심적 축적 양식

일본 상부구조의 복합성은 일본 자본주의의 자기중심적 축적 양식과 조응됩니다. 전자는 후자를 원활하게 기능되도록 하고 후자는 전자의 영향력을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양자는 전후 일본의 뚜렷한 역사상의 궤적을 선명하게 구획짓습니다. 이와같은 궤적을 그리면서 일본 자본주의는 가속화된 보폭으로 팽창했습니다. "일본의 기적"은 바로 이러한 궤적의 산물인 것입니다.

일본의 자기중심적 축적 양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급속한 성장 시기" (1960년으로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동안, 일본 경제는 주로 국내 시장과 전 열도를(특히, 해안 지대를 중심으로) 단일의 거대한 산업 기지로 개조시키려는 데에 목표를 둔 산업 계획을 기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2) 국가의 산업 보호 조치는, 일본을 거대한 생산 기지로 요새화하기 위하여, 주로 선도 재산업으로 집중되었습니다. (3) 산업상의 분출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원자재류를 수입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수출이 촉진되었습니다. (4) 60년대 후반 해외로의 진출이 시작되면서, 일본의 전략은 제삼세계 아시아 지역과 여타 지역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노동분업 체계로 조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수평적 노동분업은 심지어 여타 중심부 국가들도 미미한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5) 일본은 외래적 요소들이 배제된 순수 일본인들의 국

가여야만 한다는 정부의 철학에 발맞추어, 일본의 기업들은 제삼세계 제국의 이민 노동자들을 유입하기 보다는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지역으로 진출하는 데에 골몰하였습니다(노동력의 수입은 현재까지도 기본적으로 금지됩니다). (6)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통상적인 활동 방식으로 일본에 침투하려는 시도를 저지시키면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순수 일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축적양식이 진행되면, 이념운동도 일국 중심으로 보려는 편향도 그 물적 토대가 강화되기 마련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축적양식하에서는 기업의 우위성이 굳건하게 자리잡게 되었고, 경제 전략의 성공 그 자체에 의해 진상이 가리워진 채, 경제제일주의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총평(總平)으로 집중된 노동운동도 보다 많은 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에 집중되는 경제 개량 운동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노동자의 작업 터전은 여러 산업에서 점차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에서 우위성을 확보했다는 것은, 일반 대중들이 그들이 일하는 기업을 일상활동의 축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일본의 거대 기업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하청업체로서 거느리고 있으며, 임금이나 노동시간, 상여금 제도와 같은 노동 조건들은 거대 기업보다 하청업체에서 훨씬 열악합니다. 게다가 대기업들은 소위 종신고용제하에 있는 정규 고용인들(full-fledged employees)과 보수를 보다 적게 주어도 되는 임시 내지 하청 노동자들을 함께 조직 편제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조 운동은 주로 노동계급중의 특권층 내지 대기업체의 정규 고용층(전체 노동인구의 5%에도 조금 못 미치는 비중을 차지합니다)을 조직 구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환경에서는 노동자들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회사의 그것과 동일시하게 되며, 유력한 대기업체의 정규 고용층은(그들 자신이 노조 구성원인 경우가 허다한 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체나 하청업체의 동료 노동자들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구조적으로 여러 분파들로 나뉘어지고, 그들 사이의 연대감도 미미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등에 업고서, 그들의 이해를 공공연하게 회사의 이해와 동일시하는 거대 노조들이 6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 후 전체로서의 노동운동에서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자본이 70년대 초반부터 대대적인 해외 진출을 시작했을 때, 거대 노조의 지도층은 일본 산업의 대변인역을 자임했거나, 그들이 몸담고 있는 기업에 의해 초과 착취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인민들에게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경제의 자기중심적 발전 양식이 관철되는 일본의 특수한 상부구조하에서는, 제삼세계에서 투쟁하는 민중과의 연대는 고사하고, 국제주의의 원칙마저 방기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체제내적 비판 세력으로 남아 있는 한, 일본의 주류 진보세력은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물적 토대조차도 비판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러한 의지조차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체제내화된 주류 진보세력은, 이러한 역사적 불력이 와해되기 시작함에 따라, 부르조아지와 자민당에게 투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신진보파-반대파에 대한 반대파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던 급진 진보파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까? 베트남 전쟁이 계속되고 일본 자본주의가 '초과 성장'을 구가하던 시기가 막바지로 치달았을 때, 베트남 인민과 연대한 반제국주의(反帝) 활동은 가위 폭발 양상을 띄었습니다. 급진주의의 범세계적인 대두와 일치하여 용출(湧出)된 일본의 급진세력은 이 시기의 가장 역동적인 사회운동 세력이었습니다. 혁명지향적인 정치 행동 그룹, 학생 행동 위원회, 선도적인 노동자 그룹,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행동 그룹 및 관련 지식인 그룹으로 묶여진 이 세력은 신진보파로 불리워졌습니다.

숫적으로는 소수지만 급진적인 호소력을 무기로 인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그 당시 주류 진보파를 압도한 신진보파에 대해 국가도 정면으로 맞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반제국주의의 대의를 전면에 내걸고, 일본 제국주의의 해외에서의 경제적 수탈을 규탄하며, 베트남 전쟁에서의 일본의 공모 행위를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남한 민중과의 연대를 표명하면서 그 자신을 주류 진보파로부터 구별짓는 신진보파 세력이 국제주의의 대의에 공헌했음은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류 진보파는 외부 세력에 의한 잠식을 경계하며 현상 유지에 공급하는 입장을 취했던 반면에("베트남 전쟁으로 우리의 평가가 교란될 수 없다"), 신진보파는 잘못된 현상을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1969~70년 사이에는, 이러한 운동이 학생층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수많은 대학 건물 점거로 이어졌습니다. 신진보파 운동은 대부분 거리에서 이루어졌지만 대학 건물은 한 동안 학생대중들이 투쟁에 가담하여 교육과 사회 전반의 문제점들과 씨름하는 근거지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차별, 미해방 부락 사회(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흡사한), 및 여타 차별 대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급진 여성 운동도 분출되었습니다. 신진보파 운동은 다양한 지역사회운동에도 영향을 미쳐 산업재해와 환경오염, 핵발전소 및 도쿄의 나리따 공항 건설 계획에 의한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조직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진보파 운동의 물결도 1973년이 저물 무렵 간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한층 강화된 진압에 나섰지만, 이것이 이 운동이 실패한 유일한 이유일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운동이 표방한 반제국주의는 추상적이어서, 국제주의는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러면 다시 거리에서 경찰과 맞서 싸우는 식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버리고 마는 식이었습니다. 한편, 일본 제국주의의 사악한 행동에 관해 설교함으로써 '일본성'의 부정으로 치닫게 하였지만, 이러한 활동이 연대 활동으로 효과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신진보파세력은 일반 대중을 자극하는데 그쳤을 뿐, 지속적인 대중운동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그 후의 대중 운동에 귀중한 유산을 남겨 주었지만, 기존의(체제내화된)반대 세력에 대한 급진적 반대에 그친 운동이었던 한 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와같이, 이 운동은 주류 진보파의 견제를 전제로 하고 있었으며 그 자체의 토대를 견고하게 구축해 내지

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진보파 세력도 주류 진보파를 체제내로 통합시켰던 똑같은 역사적 불력의 산물이었습니다.

4. 전후 역사적 불력의 제계약(諸制約)

일반적으로 말해서, 외부 세계는 특수한 역사적 불력을 통해서 한 사회의 내부적 진화 과정과 관계를 맺으며, 중심부의 대다수 국가들의 역사적 불력들은 다소간의 편차를 드러내지만 노동자 사이의 평등과 제삼세계와의 인민 대 인민 사이의 연대 관계의 진전을 저해하는 쪽으로 기능하는 식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역사적 불력은 사회 전체와 관련을 맺으며 노동계급이 지닌 특권만을 편애하지는 않습니다. 외부 세계는 주어진 일정한 역사적 불력에 의해 영향을 미치면서, 중심부의 인구 전체는 연대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그 자체의 이미지와 다른 지역들 인구 전체의 이미지를 투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역사적 불력이 고정된 불변의 유일한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에 의해, 역사적 불력은 상호적대적인 계급 이익들과 여타의 모순들로 쪼개집니다. 따라서, 한 사회에는 전투적인 노동자층이나 민중운동이 흔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 사회에서 국제적 연대가 모색되는 시점이 도래하면, 국수주의적인 획일성이 부지불식간에 불거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일정하게 결합된 토대와 상부구조에 뿌리를 두고 그러한 획일성이 드러났기 때문이지, 단순한 이데올로기상의 오염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적 연대라는 대의에 비추어 볼 때, 역사적 불력 그 자체는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근본적인 변혁 대상이 되어야만 됩니다. 역사적 불력이 총체적인 개념인 한, 그것의 변혁 또한 경제, 자원, 문화, 국가의 지위, 국제관계 및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방식을 포함한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주의는 민중의 입장에서 주어진 일정한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통합된 노력의 일부로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람씨가 개념화한 역사적 불력에서는, 일정한 국민적 구성체가 전제됩니다. 그람씨는 역사적 불력을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국민적 구조틀로서 인식했습니다. 그람씨에게 역사적 불력은(다소간 정태적인) 일국적 총체성을 대표합니다.

일본은, 한 국가의 상부구조가 외부적 관계들을 내부화시키는 쪽으로 작동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실질에 있어서, 상부구조는 외부적 관계와 내부적 관계를 수렴시키는 매듭 구실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일국적으로 비추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상부구조는 외부적 관계들을 내부에 체화시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고립된 국민 경제는 이미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불력은 근본적으로 그 자체로 완결된 일국적 총체성일 수는 없으며, 안정의 시기에는 은폐되지만 위기의 시기에는 가시화되어 작동되는 국제적 계기를 자체 내부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II. 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전망

1. 미국의 주도권 쇠퇴와 전후 체제의 붕괴

70년대 중반 이래 일본 자본주의 경제의 거대한 팽창과 함께 진행되고 또 그것에 의해 가속화된 미국의 주도권 쇠퇴는 다시 독특한 방법으로 앞서 말한 전후의 한 역사적 불력을 와해시켰으며 또 이것이 그 급진적 반대파와 함께 주류적인 전후 진보파를 붕괴시키는 요인이며 또 이것이 동시에 예전 진보파의 일국적 제약에서 벗어난 다른 유형의 민중운동의 출현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앞으로의 가능성이지 아직 현실은 아닙니다. 이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 운동은 어려운 변형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오래된 역사적 불력은 두 개의 주요 이음선에서 풀어지고 있습니다. 상부구조적으로 군사 문제는 미국이 책임지고 경제 문제는 일본이 책임진다는 미국과 일본간의 안락한 분업관계가 미국이 일본을 계속 그 군사적 우산 하에 유지할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종식되었습니다.

베트남전쟁에서의 패배 이후 워싱턴 당국은 일본이 공개적으로 군사적 부담을 증대시킴으로써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제국주의의 짐을 분담해야 하며 미국의 군사적 전략과 완전히 통합함으로써 전쟁을 준비하는 체비를 차려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나카소네 일본 수상은 1983년 워싱턴에서 일본이 일본 영토를 포함하는 세 개의 폐색점이 미국과 소련 간의 전지구적 대결 관계에 있어서 소련 함대가 일본해에서 활동하는 것을 포위하도록 단결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불침함모가 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외부적 상황에서 내부적 상황을 분리시킨 장벽이 숙명적으로 돌파되었으며, 전후 시기의 전형적 일국적 가정이 자유로운 세계주의적 어프로우치에 의해 대체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전후 일본 중심의 축적 양식은 포기되고 전지구적 축적 양식으로 대체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일어났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1973년 이후 범세계적인 자본주의의 위기의 시기에 있어서 일본의 자본주의는 그 궤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그 자기 중심적 행동을 강화시켰습니다. 이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본의 부르조아지는 마이크로전자 기술을 생산 과정에 완전히 도입시키고 노동조직을 수정하는 완전한 산업 재편과 합리화를 수행함으로써 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한때 호전적이었던 총평의 노동운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집중적인 수출 드라이브에 있어서의 부르조아지의 성공은 일본의 공산품, 특히 자동차와 전자 산업의 경쟁력을 무섭게 강화시켰습니다.

국내 시장이 대체로 정체 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일본의 비즈니스는 이 산업 요새에서 세계 시장, 특히 미국과 서구 시장 속으로 강력히 돌진했습니다. 수출이 지난 10년간에 있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의 약 반을 담당했으며 그 시기에 있어서 그 유명한 일본 경제의 특출한 성과는 이 성공적인 수출 드라이브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부메랑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 일본과의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미국이 보호주의적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대미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이 불균형을 시정하라고 일본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시기에 있어서 전후의 일본 정부는 경제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의 거래를 확대하곤 하였습니다. 미국의 전

략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군사적 부담을 가속화시키겠다고 제안하면서 일본 자본주의는 그 자기 중심적 경제적 성과만큼 약간의 미국의 관용을 사곤 했습니다. 1985년 정도가 되면 워싱턴 당국이 앞으로 바터거래가 없을 것임을 통명스럽게 밝힘에 따라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무역이 문제 자체였습니다. 그해 일본은 미국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5백 5십억 달러라는 엄청난 흑자를 벌어들이면서 갑자기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되고 동년말경이 되면 미국이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전개 과정에 있어서 재미있는 점은 전전 시기와는 달리 국가대 국가의 분쟁이 배타적인 경제권들을 낳는 대신에 단지 자본의 전지구화와 상호 침투를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미국의 압력에 대한 일본의 대답이 이른바 마에카와 보고서로서 이것을 나카소네 수상이 1986년 워싱턴으로 들고가서 레이건 대통령에게 제시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일본 시장을 개방하여 농산물을 포함하여 대미수입을 충분히 증가시키고 시장 메카니즘들을 완전히 자유화시키기 위해 비즈니스를 민간화시키고 수출 산업(자동차, 전자 산업)의 재배치를 통해 일본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재조직하고 조립, 가공 산업들을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에게 재배치시킴으로써 국제적인 분업을 재조직하고 나아가 일본의 문화와 행동을 경제의 국제화에 맞도록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 전지구적 자본축적으로의 이행

이것이 일본 자본의 축적 양식에 있어서의 주요 변화를 표현했습니다. 일본 자본주의는 집중적 팽창 궤도에서 벗어나 단지 세계 최대의 국가 시장들의 하나로서인 경우만 제외하고 그 국경을 무시하면서 전세계적 규모로 완전히 새로운 축적궤도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자본은 그 국가적 아이덴티티를 상실하면서 충분히 초국가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1986년 발행된 MITI의 한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세계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본다는 의미에서 전후 일본 경제의 전개 패턴을 프틀레마이오스적이라고 특징지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이론으로 이행해야 한다”

자본의 대탈주가 이렇게 미국으로는 제조 플랜트들을 건설하기 위해 진행중이며 이웃 아시아 국가, 즉 남한, 대만, 싱가포르, 타이 등으로는 근해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80년대에 있어서 연간 해외직접투자가 1백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지만, 1987년에는 그것이 2백 5십억 달러로 도약하리라 예상됩니다. 1988년쯤 되면 일본은 미국 1개국에서만도 2백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은 더 이상 대미국, 대유럽 수출을 위한 일본 자본의 도약대로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승용차를 포함하여 산업제품이 일본으로 수입되기를 바라는 일본의 근해 생산기지로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일본의 전체 산업구조, 기업 행동, 사회적 실천, 기업 철학, 국가적 지위에 영향을 끼치면서 일본 사회와 일본 경제의 전 국면에 심대하고 광범위한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사회적 정치적 결과들

전후 역사적 블록은 이런 근본적 변화들 하에서 붕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국 평화라는 가정을 발생시키는 그 상부구조적 체제와 자기중심적 자본축적 양식 그리고 그들 간의 독특한 배합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류의 새로운 역사적 블록이 전후의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이 논문의 문맥에서 여기서 세 가지 점이 지적되어야 합니다. 즉, 첫째 자본의 전지구화가 이 과정에서 앞장서서 일본 경제의 공동화를 일으키고 대량실업을 유발하고있으며, 둘째 그것이 점차 국가로부터 자기 중심적 자본축적 양식에 뿌리를 둔 그 예전의 정통성을 박탈하고 있으며, 셋째 일본에서는 지난 수십년 간에 있어서 경제결정론적으로 주도된 대중의 마음이 아직도 강하게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의 마음에 있어서의 완전한 혼란과 국가의 지위에 있어서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뒤따릅니다. 사람들은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제화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며, 국제화한다는 것은 일본 내의 플랜트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로 나가야 하며 미국으로부터 쌀 수입을 시작하기 위해 일본의 농업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시 노동자들이 해고를 받아들여야 하며 농부들이 농사일은 집어치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극도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희생시키는 댓가로 무엇이 살아남을까요. 어쩌나하면 그 수혜자들은 일본에 사는 보통사람들이 아니라 일본의 상사들입니다. 이들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거대 세계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스스로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화가 일본 노동자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까요. 이 갈등은 일본 경제가 집중적으로 확대되고 있었을 때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었습니다. 이 새로운 상황은 바로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문제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80년대 초기와 중간기에 있어서 일본 산업 사회의 핵심 이른바 종신고용제 하의 대기업 성인 정규 피고용자들은 보다 높은 수출 경쟁력을 위하여 점점 더 많이 임시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는데 그 대다수가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기능 하나 하나가 차례로 저임금 노동자로 충원된 특화된 하청업체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군살빼기를 통해 대기업들은 경영상태프로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회사에 충성스러운 노동계급층을 축소시키는 한편으로, 일본 노동자의 70%를 상회하는 임시, 저임금, 비특권 노동자들은 기업과 노조양자에 대해 충성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대기업들의 사회적 통합력에 기초했던 일본 사회의 응징성이 점차 산만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본 사회는 잠재적으로 혼돈된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전후의 모든 사회적 규범들과 기준들이 대체물없이 해체되면서 주류적 반대파들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냐에 대해 무어라 말할 바를 모르면서 행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전후 민주 세력의 정치적 가이드라인인 ‘평화와 민주주의’는 구체제의 정돈과 함께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신좌파는 정치적 빈민지구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자본의 언어인 돈과 시장 메카니즘이 거의 완전히 사회를

정복하면서 인간 유대와 연대의 언어를 파괴시켰습니다.

이것이 일본이라는 국가의 역사적 본질에 있어서 변화를 부득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후 정치 형태를 청산하겠다고 맹세한 나카소네 수상은 '국제화'에 바쳐진 국가를 위해 '국제국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족 국가를 국제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세계 제국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경우는 다릅니다) 명백히 자기모순적입니다.

그러나 이 어색한 이중신념은 국가 이해와 국가의 지위에 대한 재정의의 동반합니다. 국가 이해는 이제 미제국(자유세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지구적으로 펼쳐진 일본 자본의 이해와 동일시되고 있으며 국가라는 것은 그러한 이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가 민주 국가로 남아 있는 한 그리고 그 영토 내의 사람들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한, 이 '국제 국가'가 어떻게 그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일본의 지배계급이 당면하고 있는 독특한 딜레마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수척해지는 정통성이 왜 새로운 민족주의가 정부에 의해 선동되고 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일본 제국의 자기 중심적 영토 팽창과 손잡고 나간 전전의 제국적 민족주의와는 달리, 이 신민족주의는 바로 경제적 군사적 현실에 있어서의 자기중심성의 상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수정된 황제의 이데올로기와 일본의 문화적 고귀성에 대한 여러 톤의 주장들과 여타의 일본 중심적 견해들이 마구 내뿜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카데미즘을 표방하는 관리들과 매체들이 이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데, 여기에서 몇몇 사람이 이미 자연스럽게 확산된 대중의 커다란 경제력 과시를 재질거리고 그것을 더욱 더 부추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반화시킨다면 이것은 역사의 이 시간에 점차 두드러지고 있는 자본과 국가 사이의 불화의 일본판인 듯이 보입니다. 서로 출신은 다르지만 국가와 자본은 두 세기 동안 다소 조화롭게 함께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리부터 예정되어 있던 조화였음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아직도 국가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거부하는데 이 사실이 정치적 국가의 정통성을 밑으로부터 갇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불화가 보호주의적 의회와 자유무역 지향적인 행정부 간의 만성적 갈등에 의해 은연중에 나타나는 듯이 보입니다. 미국의 초국가적 자본의 전지구적 이해를 반영하면서 레이건 행정부는 그 나라의 제국적 양상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에 기반을 둔 의회는 미국의 일국적 양상을 강조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모순이 점차 가시화되는 하나의 동일한 국가권력(미제국과 단일의 정치적 국가)의 이중성의 형태로 그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 경향이 미국과의 불균등한 발전과 그에 따른 갈등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적'과 '국가'라는 언어적으로 쪼개진 용어의 두 현실이 조만간 서로 충돌할 것입니다.

4. 새로운 국제 운동의 재구축

이렇게 진전해 가는 경향이 일본의 좌파세력과 제3세계의 좌파세력의 협력에 대해 어떠한 환경

을 마련하고 있는가. 다음의 점들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1) 구역사적 불력에 내재하는 일국적 가정들의 상실은 제3세계에서 투쟁하는 인민들과의 운동적 연대를 창출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그 반대로 제3세계 다수 민중에 대한 교만과 인종주의와 국수주의를 강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세계적 투기장에서 전전 지위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 자본과 일본 국가의 이해와 자신의 이해를 동일시하도록 유도된다면 후자의 경우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때의 투쟁은 그 자체의 물질 기반을 갖고 있었던 전후 일국적 환상과 추상적이었던 국제주의 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두 국제주의 사이의 투쟁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새로운 환경은 일본의 인민들이 이 투쟁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면서 여타의 세계 노동자들과 제휴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2) 이 가능성은 단지 새로운 운동의 파라다임이 창출되어 일본의 토양에 뿌리를 내릴 때만이 현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아직도 그 도상에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일본 민중운동의 재건이 단지 그 상황의 새로운 총체성, 즉 일본 사회에 내화된 국제적이고 전지구적인 관계의 고려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전지구적인 자본에 얽혀 그것에 의해 통제되는 제3세계 및 여타 민중의 제투쟁과 분리하여 어떤 일본의 운동을 구축하려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여타 인민들의 투쟁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공식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일본 출신의 초국가적 기업 하나를 들어봅시다. 일본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의 부분은 종종 경영진 및 기술진 뿐이고 반면 실제의 생산 기능들은 전세계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 내에서 노동운동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 회사의 일본 부분에 있는 노동자들이 한국, 대만, 멕시코 및 기타의 노동자들과 제휴하여 함께 싸운다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 사이드에는 노동자 운동은 없고 자신이 자본축에서 있다는 허위의식을 가진 경영스태프진과 전문 기술자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3세계 인민과의 동지애의 정신으로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오늘날 일본민중운동의 재건에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적 연대가 편협한 운동 구조에 형식적인 부수물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요구하는 급진 민중 운동의 재탄생에 필수물이라는 것입니다.

(3) 일본의 민중운동의 재건은 일본 내의 여러 상이한 부분 사이의 분열과 반목을 극복할 방법과 수단을 우리가 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일본 내부에서 탈산업화의 과정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심과 주변의 관계, 즉 이를테면 초국가적 자본의 세계적 대도시인 동경과 특히 후카이도나 큐슈와의 관계입니다. 후자는 정체되고 있으며 동경에 점점 더 종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다소 동질적인 전체로 인식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니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군더 프랑크가 말하는 중심부-주변부 체인들의 컴백이 있습니다. 이 체인들은(계급·계층간에) 수직적으로(지역간에) 수평적으로 재조직되며, 사람들을 통합되기 힘든 수 많은 부분으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 체인들은 물론 국경선을 넘어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과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여타의 국가들에까지 넓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뿐만 아니라 자

본과 힘의 거대한 축적체인 핵심지역으로서의 일본이지만, 민중적 관점에서 그것이 견고한 전체는 아닙니다. 일본 사회의 이 환상적인 하나됨은 이렇게 극히 취약합니다. 이것이 왜 동경과 오사카에 있는 도시의 슬럼지역에서 일고 노동자들이 옷차림이 좋은 그들의 동포들보다도 필리핀의 무단 입국자들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가의 이유입니다. 요컨대 일본을 이리저리 관통하여 해외로 뻗어 있는 중심부-주변부의 체인이 민중들에 의해 명백히 보여지면 그들이 국경선을 넘어 사고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평등 관계로 그것을 대체하고자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 일본은 오늘날 아마 자본의 논리와 언어가 최고의 침투력에 도달한 국가일 것입니다. 자연, 가정, 생활, 성애, '전통적' 문화가 포화점까지 상품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점잖은 인간 관계가 조직되는 사회적 기준들의 거의 전적인 상실을 낳았습니다. 대다수 인구가 돈을 위해 경쟁하는 물화(物化)되고 상품화된 관계 속에 얽혀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반감 역시 증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새로운 사회 모델을 추구하는 사회운동들이 소비자들을 유기 농법을 하는 농민들과 직접 연결시키는 소비자운동, 자연보전운동, 공동체에 기반을 둔 여러 사회생태학 지향운동, 노동자 집단 운동, 활발한 여권 운동 등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일 녹색당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조직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운동들은 몇몇 대결적 투쟁들(공항 계획에 반대한 나리타 농민들의 20년 투쟁처럼)에 의해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행동 형태들은 온건하며 이들은 아직도 그들의 잠재적으로 급진적인 사회적 특질에 걸맞는 그 자신의 정치적 표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민초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들 운동은 이들이 얻기 위해 투쟁하는 목표가 자본의 논리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중의 투쟁에 새로운 논리를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발전 모델의 전체적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은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서 매우 급속한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앞으로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점잖은 인간의 감각으로는 찾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대부분의 발전도상국들에 부과되고 또 그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시행된 발전모델은 이미 일본의 성공 사례에 의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여러 사회 운동들에 의해 프로젝트된 바와 같은 다른 목표로 일본을 재지향시키는데 성공하여 그에 따라 이웃 아시아 국가들과의 그 관계들을 재정립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개발 코스 선택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이론적 영역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 운동들이 너무도 약해서 이렇게 될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운위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따라서 결국 일본의 민중들이 제 3세계 민중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국내에 기반을 둔 생존 가능한 민중운동세력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 그리고 일본주위에서 진행중인 상황은 제 3세계의 인민과 함께, 여기저기서 색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전지구적 체제에 맞서서 또 앞으로 입안될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공동투쟁의 원리 위에서 싸우는 그러한 진보세력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세계 질서가 서로 다른 목적에서 행해지는 공동투쟁을 통해 계획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남북의 진보세력들 사이에서 진지한 토론이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것, 이 자체가 국제주의라고 생각한 신진보파의 고립주의적 견해와 우리의 견해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립주의적 견해는 그것이 제 3세계 민중과의 구체적인 공동 투쟁에 참여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중심부와 주변부에서의 투쟁의 실제적인 상호연계를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계가 국민혁명들의 기계적인 추가의 결과로서 변하리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오류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일본에서의 그러한 국제주의적 진보세력의 창출은 우리가 어떻게 제 3세계 민중의 투쟁과 우리 자신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6) 그러나 일본의 발전과 제 3세계의 발전 사이에는 시차가 불가피하게 존재합니다. 자본주의적 동부 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고려할 때, 필리핀에서는 이미 혁명이 진행 중이며, 민중 세력의 정치적 사회적 격변이 남한을 뒤흔들고 대만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잠재적인 화약고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세계 구조 때문에 사회 변화가 일본에서보다 그 국가들에서 더 일찍 발생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국가 권력은 본질적으로 세계적인 위기라 할 수 있는 것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전가하기 마련인데, 채무국들에게 부과되는 IMF의 요구 보따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듯이 강대국이 약소국으로 그 내부의 위기들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이렇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전가되면서 불균등하게 발전합니다. 혁명 또한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혁명적 투쟁과 혁명화된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일본과 같은 국가들의 좌파에게는 직접적이고 긴급한 필요성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국제적 연대의 개혁주의적 차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주요 기여는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군사적으로 멀어져서 비동맹적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의 일본의 완전한 관련은 일본에 대한 국가적 안전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군사적 경제적 수단에 의해 제 3세계를 침몰케 하는 미국의 능력을 강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일본은 '극동의 돌발사태'에 대한 미국의 무력 개입에 동참해야 하며, 중동을 포함한 여타 지역에서 심각한 대결 상황이 발생하면 그 해협을 봉쇄하여 소비에트를 극동에 가두어 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련은 아직도 실제적인 군사적 개입은 아닐지라도 이미 제 3세계의 해방운동들에 짐을 가세시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연관관계속에서 일본의 공식적인 개발원조 프로그램은 완전히 재고되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저장도전쟁 전략의 채택과 함께 경제 원조는 점차 군사적 성격을 띄어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그 거대한 국제적 수입을 산포시키기 위해,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일본은 민중의 저항에 의해 위협을 받는 친미 정권들에 그 원조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5년간에 걸쳐서 제 3세계에 2백억 달러를 재순환시킨다는 일본판 '마샬플랜'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원조의 군사적 함의는 금년 9

월에 일본이 1992년까지 그 공식적 개발 원조를 GNP의 3%까지 증가시키고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 중남미, 카리브해, 지중해의 안정을 고양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미상원에서 채택된 결의안 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결의안이 1988 회계연도의 미국방예산안의 일부라는 사실은 특기할 만합니다. 군사적 개입과 혁명화된 국가들 (예컨대 베트남)에 대한 미국 주도의 구역금지조치와 남아프리카에서의 투자회수 및 여타의 유사한 직접 조치에의 동참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일본이 이들 국가들과 유지하고 있는 구조적으로 착취적인 관계를 종식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제 3세계 민중의 목적에 의심할 바 없이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혁명적 목표가 아니며, 논리적으로도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개혁주의적 변화조차도 전후의 주류 진보세력이 붕괴했고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유주의적 전통이 없기 때문에 진보파가 근본적으로 재건되지 않는다면 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무시무시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일본은 그 죽음의 종말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가장하여 사라져 버린 역사적 블록을 새로운 형태로 재조직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울 것입니다. 상부구조와 토대 사이의 분열들과 지배계급이 안고 있는 상부구조 자체 내의 분열들이 무시무시합니다. 국가와 자본이 분리될 때 인민이 그들의 독립적 아이덴티티를 수립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와 동아시아 해양핵위기

Hiromichi Umebayashi (우메바야시)

일본열도와 마찬가지로 한반도도 바다에 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미국이 공공연히 핵을 육상배치한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는 해양핵이 한반도를 둘러 싸고 있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양핵은 한반도 핵전쟁의 현실적 위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개막식에서 저는, 미국의 새 핵전략중 하나의 중심인 순항미사일 토마호크가 일본의 횡수하에 있는 미군기지에 배치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국외에 토마호크 능력을 가진 군함을 모항화하는 것이 세계에서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으나, 눈에 띄는 것은 그뿐 아닙니다.

미국이 이 계획을 발표했을 때, 수직발사 미사일 (VLS) 이 불리는 토마호크의 최신형 발사대를 장비한 군함은 미국에 3척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3척 가운데 2척을 북동아시아, 또는 북서태평양에 있게 한다는 것에서 미국이 이만 저만이 아닌 역점을 이 지역에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북동아시아, 북서태평양의 민중의 미래에 초래될 커다란 전략적 흐름이 그 배후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본의 군확과 한·미·일 군사일체화 현상에 접하면서 그것에 관해 문제제기 하고 싶습니다. 우선, 미국의 해양전략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해양전략이 정식으로 반동된 것은 1982년입니다. 해양전략은, 말하자면 레이건 정부와 함께 등장했다고 말해집시다만, 결코 레이건 정권과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최근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일신문의 石川巖이란 기자가 최근 워싱턴을 방문, 해양전략의 제창자인 레만 전 해군 장관과 현역군인, 전략 연구가들과 인터뷰한 연재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가 얻은 해양전략은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전략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짚어두고 싶습니다만.

해양전략은 해군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입니다만 결코 해군만의 전략은 아닙니다. 미국 국가 전략의 일부분인 공군, 육군을 끌어넣은 전략입니다.

해양전략의 특징을 개별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군의 역할을 병력과 물자의 수송, 육상전쟁의 측면원조 등 보조적인 것에서, 전투의 선도적인 역할을 부과한 공격적인 것으로 전환한다. 이점에 해양전략개념의 근본적인 새로운 점이 있습니다.

2. 그를 위해 평시에는 세계에 바다에서의 해군력의 전진전개를 중시한다. 특히 평시부터 소련의 급소에 공격력이 미치게 배치를 하고, 언제든지 전쟁의 이니셔티브를 취할 준비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을 되풀이 하게 됩니다.

3. 제 3세계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불안요인을 제거, 그것이 확대되는 것을 압살한다. 그를 위해서 정치불안정 지역에서의 해군의 프레젠테를 증가한다. 미국의 사고방식중에는 언제나 제 3세계의 항쟁이 강대국의 항쟁으로 발전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해양전략의 결과, 북서태평양은 최근에 없던 군확과 군사적 긴장격화상태에 있습니다. 오호츠크해, 일본해에서의 군사연습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84년부터 85년에 걸쳐 미국의 해군은 전군사력의 3분의 1을 동원하여, 평시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해군연습을 북서태평양에서 행하였습니다. 1986년에는 일본해에서, 그 지역으로서는 사상최대의 대소해군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해군연습에는 일본에 기항한 미국의 핵 토마호크를 적재한 전함 뉴저지 등 10척에 가까운 군함이 한국 부산에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안고 있는 가장 가까운 예로서 현재 일본해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분단올림픽을 강행하기 위한 대연습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전함 뉴저지를 다시 한국에 기항시켜, 그 수상타격대라 불리는 함대를 일본해에서 전개했습니다. 원자력 항공모함 니미트와 통상형 항공모함 미드웨이도 투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횡수하를 모항으로 한 토마호크함도 이연습에 협력하여 기항시기를 앞당겼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일본해 연습은 실질적인 한·미

일 합동연습이 된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을 예정으로 전군함 170척을 투입하여, 참가병력 3만명, 항공기 약 200기를 동원, 대해군연습을 전개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미국해군과 합동연습을 이 기간에 실시할 것이라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는 일본근처에서, 해양전략과 같이 가시적인 기지의 강화, 군확의 강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자력 잠수함의 활발화가 발견됩니다. 소련의 태평양의 진출을 저지하고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전쟁(ASW)에서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의 전진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워트킨즈 전 해군 작전부장이 쓴 “해양전략”이라는 제하의 논문에 “소련의 모든 잠수함 -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모든 잠수함에 격렬한 공격을 가하여, 전황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양전략은 핵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는 전략이라는 맹렬한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일본에서 미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의 기항횟수는 해양전략이 적용되었던 1982년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81년에는 연간 7회였던 것이 82년에는 연간 21회로 늘었습니다. 85년에는 35회로 이것은 베트남전쟁시의 최고 기록을 상회하는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후 기록은 경신되어 85년, 86년에도 연간 41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데이터는 충분히 알 수 없으나, 틀림없이 비슷하게 급증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말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미일 삼군통합실동연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연습의 이름은 깡엣지 87이라고 불리었습니다. 한미간에는 매년 팀-스피리트라는 삼군합동연습이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연습도 해양전략에 부합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표면상 시나리오는 북해도에 상륙하는 소련군에 대항하여 역상륙작전을 행하여 북해도를 탈환하는 것이라 말합시다만, 실은 그 시나리오 설정의 전제로는 일본이 해협봉쇄를 행하여 소련의 태평양함대를 일본해에서 봉쇄하려고 했을 때, 소련은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북해도를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상정이 있습니다. 이 상정에 기초하여 해군 뿐 아니라 육군, 공군의 연습이 실시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군산기지에서 F16전투기를 이 연습을 위해 직접 참가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자위대 증강이 거의 미국의 해양전략요구에 부합하여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일본 자위대는 해상방공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지에서 벗어나 멀리 바다위 상공에서 적의 공격을 요격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자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지스 함이라는 무척 고가인 군함을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지스 함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군함이라 자랑하는 것으로, 전자두뇌에 의해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고 있는 적을 격추시킬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페르시아 만에서 이란여객기를 격추시켰던 군함과 같은 종류

입니다).

더우기 수평선 저쪽에 있는 적기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OTH레이다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이다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모두 미군에 제공되어져서 그 분석을 미군에 의뢰하려 한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구주(九州)의 에비노시에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초장파(VLF) 통신기지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VLF란 잠수함에서 사령을 보내기 위한 전파입니다. 짧은 파장의 전파는 잠수해 있는 잠수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VLF 15m길이의 수면 밑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일본 名古屋 근처에 VLF기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서태평양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위대가 건설하려 합니다. 이기지의 주요임무는 대마해협, 조선해협을 시작으로 대개는 소련에 대한 태평양 CHOKE-POINT의 감시, 봉쇄의 임무를 맡고 있는 일본잠수함에 지령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관해서는 2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조선해협, 대마해협의 봉쇄는 한국영해에서의 활동과 한일 양 해군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 전파 자체가 미국의 해양/핵전쟁의 지령에도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잠초계기 P3C도 100기를 구입하여 소련의 잠수함에 대한 감시, 공격체계를 완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육상자위대의 최대연구과제는 일본열도에서 파트리오트 지대공 미사일의 방공망을 둘러쳐서 미태평양함대에게는 최대의 위협인 소련의 백파이어 폭격기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지만, 방위비가 GNP의 1%를 돌파하여 오로지 증강일로에 있는 일본군사비의 대부분은 이제 일본열도의 방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미국의 해양전략을 공동으로 분담하기 위해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혹은 서태평양전략 -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미국의 중요한 전략의 일부분입니다만 - 으로 한·미·일이 하나로 통합되려하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반복됩니다만, 미국이 이 지역에서 한미일 일체로 되는 해양전략을 전개하려 하는 의미는 소련의 힘을 봉쇄하여 한반도, 필리핀 등지에 자유로운 개입체제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거듭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해양전략이 이 지역의 해양핵 전쟁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INF(중거리 핵전략)에 의한 한정핵전략과 묶어서 제기하겠습니다.

미소의 INF조약 비준에 의해서 육상에서는 INF가 전폐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 배치되었던 INF순항 미사일과 쌍둥이격의 병기인 핵 토마호크가 이제 해양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이 유럽에서 철거하려 하고 있는 미사일은 약 430발 입니다만, 1988년까지 해양발사순항 미사일 758발이 수상함과 잠수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윌리엄·아킨에 의하면 1987년말에 이중 약 150발이 배치된 것으로 최근 수년간 급속한 속도로 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INF의 가장 중요한 배치지역이 황해, 일본해, 북서태평양지역인 것은 어제 있는 개막식

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토마호크탄재함의 일본, 한국 기항이 늘고 있다는 것이 그 확연한 예입니다.

더우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에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토마호크에는 핵·비핵 양용이 있는데, 외견상으로는 거의 구별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핵·비핵 합해서 약 4,00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최근 수년에 걸쳐 200척에 이르는 미군함에 탑재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758발의 핵토마호크가 4,000발분의 위협으로 북조선과 소련에는 비칠 것입니다. 실제로 토마호크가 발사되거나 발사의 위협이 있을 때 공격당하는 쪽은 그것을 핵으로 판단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질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해양전략은 이 핵·비핵 양용의 토마호크 체제와 하나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전략을 지탱하는 가장 정점인 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같은 이유로, 저는 한국의 핵전쟁 위기를 육상배치 핵 뿐만 아니라 똑같이 해양핵까지도 사 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사태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해양핵전쟁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국제연대가 특히나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합니다. 해양핵은 배에 의해 이동하는 이유로 인하여 대체로 동맹국의 보급이나 지원협력체제없이 는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양핵의 기항국 민중이 공동투쟁을 조직하여 이 체제를 끝장내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민중이 연대해야 하는 새로운 분야라는 것을 호소하며 저의 문제제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핵전쟁의 위기와 미국의 제 3 세계 침략 -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하여

정 기 열

20세기 접어들면서 자본의 집중과 집적의 가속적인 진행은 자본주의 경제의 조직구조를 근본적으로 벽혁시킨 거대한 산업·금융 단체들의 출현을 초래하였습니다. 전체 생산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그들의 손안에 집중시켜 경제의 하나 또는 몇몇 부분에서 지배적 위치에 올라서고, 시장에 대하여 자신의 조건을 강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그들은 자본주의적 평균이윤을 훨씬 넘는 초과이윤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에 의한 산업의 지배는 경제적으로 독점이윤의 형태로 실현됩니다.

대대적인 기업의 합병과 인수, 잉여가치 가운데 자본으로 전화할 비중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자본주의적 독점체들이 대두되었습니다. 자본집중은 그 발전의 일정단계에 접어들면 그 자체가 바로 독점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대기업이 서로 협정을 맺는 것이 비교적 용이해졌기 때문입니다. 독점으로 치닫는 경향은 대기업에서부터 발생합니다. 혹자는 이 문제를 일찌기 간파하여 말하기를 “생산집중의 결과로서 독점체의 발생은 자본주의 발전의 현 단계를 규정하는 일반적이고도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초기단계에서 독점체들은 각국의 국경안에서 지배를 확립합니다. 후일 생산 및 자본 집중의 수준이 엄청난 규모에 이르게 되면 지역 또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전체가 그들의 활동무대가 됩니다. 군국주의 배후의 추동력으로서 초국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로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군산복합체에 대한 구조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transnational Corporation이라고 불리우는 초국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부주에프는, “국제적 독점체 - 주로 콘체른, 즉, 세계 여러곳에 지사를 설립하여 판매 및 생산을 하는 국제적 독점체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고, 활동영역은 국제적이거나 자본은 일국의 자본이 지배적인 것을 국제적 독점체라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부르조아 학자들의 해석과 정의에서는 한사코 초국적기업의 독점적 성격을 은폐시키려는 노력이 언제나 따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갈 무렵에 발생했다고 보는 국제적 독점체들은 갖가지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 주력은 강력한 생산-금융독점적 콘체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이해를 갖고 초국적기업과 군산복합체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역시 부르조아학자들은 초국적기업이 현대자본주의의 발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의 진상을 감추기 위하여, 특히 그것과 군산복합체의 연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것의 독점적 본성을 위장합니다).

국제적 독점체들의 발전과정 전체를 살펴볼 때 초국적기업이 군국주의 및 전쟁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Lenin은 “제국주의란 세계를 분할, 재분할하려는 강대국들의 격렬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나라의 군국주의화를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발생한 많은 국지전과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거의 모두 원료의 공급원 및 가장 유리한 자본투자 대상지역과 판매시장을 둘러싼 자본주의 세계의 분할 및 재분할을 위한 독점체들의 투쟁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로 다른 나라의 주도적 독점체들 사이에서 체결된 국제 카르텔 협약은 20세기 전반기에는 무기생산과 그것과 밀접히 관계된 산업(화학, 석유, 전기기계, 금융, 기타 산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흥미있는 일입니다. 식민지 및 종속국에서의 전략적 원료 채취, 자본수출 및 그들과의 부등가 교환을 통하여 얻는 수입은 새로운 전쟁준비에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오늘날 국제독점자본은 세계에 대한 그들의 지배를 강화키 위해 제국주의 국가의 군사력을 이용한 “위협”이라는 수단을 노골화하고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예; 그레나다, 니카라구아, 팔레스타인, 남한). 그들은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의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군사적 잠재력의 팽창을, 해외에서 자기들의 이권을 보호하고, 민족해방운동을 봉쇄하는 주요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의 자료에 의해 더욱 극명해 집니다.

“초국적 기업은 세계의 경제적 재분할을 위한 지배(투쟁)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무기 생산이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인 까닭에 군국주의 성장과정에서 기득권을 갖게 됩니다. 무기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초국적 기업은 엄청나다(거의 다 직·간접으로 관계되어 있다).” — 로마클럽의 자료(미국의 500개 초국적 기업 중 152개 회사가 무기의 생산·수출 허가사업에, 일본의 25개 대규모 초국적 기업 중 10개사가 직접 무기사업에 손대고 있습니다) 서독, 영국, 프랑스 등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더욱 세분하여 설명하면 자본주의 체제내의 거의 모든 산업분야의 초국적 기업들은 현대적 무기생산이 고도로 기술화·정밀화됨에 따라 실제로 무기를 생산치 않는 기업들까지도 점점 더 군산복합체와 합병해 들어가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군국주의화하고 전쟁을 필요로 하게 되며 갈수록 거대한 무기생산체제로 바뀌어져가게 됩니다. 초국적 기업은 일반민수시장에서 제품판매로부터 얻는 것보다 무기판매를 통하여 훨씬 더 높은 이윤을 거둡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윤은 천문학적 숫자를 말합니다. 가장 규모가 큰 초국적 기업들이 곧 군부에 대한 주요 납품업자라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독점단계에서 발전하는 방식의 당연한 합법적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초국적 기업들이 군산화 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기생산과 판매수출이 다른 무엇에서 얻는 이윤보다 더 엄청나며 고도의 안정성 또한 독점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본수출과 경제의 군사화는 일단 시작되고 나면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스스로를 재생산하게 됩니다. 군국주의화의 가속화는 여기서 이루어 집니다. 특히 무기생산에 대한 자본의 투자와 자본수출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 기업들의 활동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거대 기업들은 많은 과잉 자본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까닭에 무기산업과 자본수출양쪽에 모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기산업 지향적이고 해외활동 지향적인 초국적기업의 출현과 발전의 배경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많은 초국적 기업은 점차 현대 군국주의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세계에 긴장상태가 존재하는 한 군산복합체의 이윤은 사실상 언제나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70년대 후반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데탕트 정책으로부터 국제적 긴장의 고조쪽으로 정책을 전환한 결과, 초국적 기업들이 군수품 생산을 확대하는 데 특별히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습니다(Reagon 정권 탄생의 배경). 무기생산업체는 정부의 은갖 금융세계상의 특혜뿐만 아니라 원료구입 및 생산과정의 노동력 착취, 유통단계, 생산완성품의 즉시인도, '심지어는 경쟁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제거해 줍니다. 실제로 미국의 초국적기업 소득이 미국 산업전체의 평균소득보다 거의 3배에 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방부, 미정부와의 군수품 계약에서 50%에서 200%의 이윤을 올립니다. 한예로 80년대는 미국의 10대 무기생산업체의 무기 생산액만해도 거의 3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군산복합체들은 금융그룹을 통하여 조직 및 경제측면에서 초국적 기업들과 연계되어 있

습니다. 즉 완결무기체계 및 군비로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과, 이들 기업의 생산활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하나의 동일한 주인 — 금융과두제(financial oligarchy) — 을 섬기고 있는 셈입니다. 무기생산을 지배하는 금융그룹들은 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혹은 민간적 색채를 띠고 있는 거의 모든 초국적 기업을 영향권안에 포섭합니다. 이러한 금융그룹들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들의 경제적 영향권을 초국적 기업의 해외활동을 통하여 급속히 확대함으로써 해외에서 팽창주의적 노력을 실현시키고, 발전도상국의 종속화와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의 근로민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며, 여러 나라의 금융과두제들 사이에 거미줄 같은 망을 구축합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위의 금융그룹들은 세계자본주의 경제를 통털어 민간부문에서 독점이윤을 거두기가 점점 힘들게 되는 사정에 따라 가장 수익성이 높고 독점화가 보장된 군비생산에 2차대전 이래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그럼으로써 반동적인 정치집단들 및 군부수뇌급들과 점점 더 밀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의 이해에 기초하여 군산 초국적 기업의 본질에 대한 정의는 “군산 초국적 기업은 큰체른 형의 국제독점체로서, 무기와 군수품을 생산하는 산업, 또는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산업(전략산업), 혹은 군사기구에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에서 기능하면서 그들의 소득의 상당한 부분을(직접·간접적으로) 무기산업에 참가함으로써 얻는 기업”입니다.

줄여서 말한다면, 군산초국적기업은 무기산업 — 즉 생산, 판매, 수출에 이르기까지 — 을 통하여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총아로서 자본주의 경제·사회·문화·종교 모든 면에서의 군사화 혹은 군국주의화 혹은 파쇼화(제국주의화)를 촉진시키며, 세계를 온통 전쟁마당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가는 자멸산업인 것입니다. 또한 군산복합체는 거대한 구조적 폭력을 끊임없이 전세계에 행사하는 데 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기에 의해 생산된 대량살육무기들을 판매수출해야만 하는, 즉 남을 죽여야만 자기가 생존가능한 존재입니다.

이제까지의 논거위에서 우리는 한마디로 한반도에 형성되어 온 핵위기, 민족절멸의 위기상황이 어디에서 근거하였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면서, '타임스피리트 훈련'에 관한 몇가지 자료에서 예를 들어 한반도에 형성된 핵위기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76년부터 계속되어 온 “핵선제 공격의 위협”이 주목적인 타임스피리트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입니다. 86년도의 예를 들어보면 20만 9천명의 방대한 병력이 오끼나와, 이와구니, 팜, 하와이, 미국본토, 필리핀 등에서 참가한 이 소위 '평화를 지키고 공산북한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어용 훈련'에 B52, F16, F14, F4, A10와 같은 핵공격 폭격기들이 동원되고, 오끼나와에서는 155mm 8인치포동 핵폭탄 및 중성자탄까지 장탄할 수 있는 원자포가 반입되었습니다. 핵배낭에 의한 북한후방에의 침투훈련, 한국신문에서 '생방화'라고 은폐시켜 말하는 핵무기, 세균무기, 화학무기의 훈련 등도 방어를 위한 훈련이라고 은폐조작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훈련에서 일본의 역할은 필수적인데 예를들어 핵적재함인 미 제 7함대가 요코스카로부터포항으로 곧바로 항진하였고 오끼나와 육·공·해군대를 비롯하여 이와구니·마자와에서도 동원되

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정책전략 지도에는 한국과 일본 간에는 국경선이 없고 38°선이 미국의 대소국경선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남쪽이 미국의 대소전진기지로서 전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일 미·소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반도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전멸의 희생을 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미참모총장 마이어는 “북한에 대하여 핵선제공격을 한다”고 발언하였으며 와인버거 전 국방장관은 “중동에서 미·소 분쟁이 발발할 경우, 소련의 군사력을 분실시키기 위해 극동아시아 특히 한반도로부터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국제적 독점체인 군산복합체의 존재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바대로 전세계를 인류멸망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문제는 어느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어느 특정단체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 인류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연대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인간의 평화와 자유문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해방과 집단의 해방문제는 너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즉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 니카라구아, 엘살바도르, 필리핀 그리고 한반도는 모두 같은 문제의 틀속에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려는 국제연대운동은 다음과 같은 인식에서 시작되고 전개되어야 합니다. 소위 제 1세계권의 평화운동이 갖고 있는 제반한계들을 건설적으로 극복해내고 제 3세계 민족해방투쟁이 반전·반핵·평화운동과 서로 다른 별개의 운동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한 운명공동체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및 유럽, 일본을 비롯한 지역에서의 이제까지의 평화운동이 가졌던 한계는 바로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점입니다. “제 3세계 민족해방투쟁과 반핵평화운동의 땀겨야 땀 수 없는 관계”는 “Deadly Connection (죽음의 관계): Nuclear War and US Intervention”이라는, 1982년 12월 4일부터 5일까지 미국의 New England에서 개최된 국제평화회의에서 밝혀졌습니다.

아까도 얘기되었듯이 근본적인 경제적 이유는 군산복합체의 무기생산과 무기수출이라고 하는 악마적 구도 즉 다른 말로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라고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적·파괴적·착취적 본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전·반핵·통일은 제 3세계에서 이미 시작한 그와같은 운동에 연대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고 둘째는 한계에 봉착해 있고 한계를 갖고 있었던 제 1세계의 평화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바로잡으며 진정한 의미의 평화·반전·반핵·해방운동을 이루어내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끝으로, 1,000여개의 미핵무기에 의해 민족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오늘의 한반도에서의 반핵·반전·평화·해방운동은 절대적인 역사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힘과 용기와 지혜를 모아 이 엄숙한 역사적 사명을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의 세계대회는 우리 민족해방투쟁의 역사속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7천만 민족의 처절한 몸부림의 역사속에서 이 엄숙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 역사적 대회로서 기록

될 것입니다. 어려운 조건과 극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국내의 여러 분들, 국외에서 수고해주신 분들, 그리고 연대정신의 뜻으로 참석하신 외국인 형제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2차 Seminar :

한반도 통일운동의 전개와 과제

- 기초발제 -

한반도 위기구조와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

허 광 (한국사회연구소)

(1) 휴전체제의 성격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최대의 민족적 위기는 휴전체제를 국제적으로 합법화 하려는 시도가 노골화하여 언제라도 새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5년간 지속된 휴전체제속에서 우리는 단 하루도 전쟁의 공포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휴전(정전)협정 자체가 이러한 공포를 약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평화보장을 위한 접점의 안전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실현되지 않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오늘의 위기를 해명하고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휴전협정은 제 2조 12항에서 한반도에서의 최후적 평화가 달성될 때까지 모든 군사력의 일체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3항에서는 한국 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의 투입을 정지할 것과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3조 43항에서는 중립국 시찰소조가 남북한 각각 5개지역에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조 60항은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를 협의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 5조 부칙에서는 휴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양측 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휴전협정은 이상과 같은 4개 항목의 규정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항이 파기되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휴전협정 조인 열흘만에 이승만과 델레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휴전협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약은 휴전협정 제 60항에서 규정한 '정치·회의'가 소집되기도 전에, 즉 '외국군의 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이 논의되기도 전에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제 6조)과 '무제한적 기지사용'(제 4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듬해 개최된 제네바 정치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통일방안으로서 유엔측의 'UN군 감시하의 총선거와 총선 이후 외국군 철수', 중공·북한측의 '중립국 감시하의 총선거와 총선 전 외국군 철수'라는 주장이 대립하여 아무런 합의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립국 감시단의 활동 역시 휴전협정의 폐기와 무력 복진통일을 주장하던 이승만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은 '남한에 근대병기를 들여오고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한국군 근대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휴전협정 제 2조 13항 역시 파기되었습니다.

(군사정전위 유엔군대표 1957. 6.21)

이로써 휴전협정이 규정한 평화보장방안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보장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의 휴전체제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휴전체제,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끝없이 지연되는 휴전체제는 의세의 한반도 분할 정책에 가장 적당한 체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휴전체제가 갖고 있는 긴장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한다는 이유를 들어 군사력 강화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화된 한국의 군수산업은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지역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자산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방위산업 자체가 갖는 문제점과 국내의 여건의 변화로 이미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소요물량의 한계와 수요의 불안정으로 가동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수출이 필요하나 방산기술의 대미의존도가 높아서 미국으로부터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무기의 표준화 및 상호호환성을 이유로 한국의 무기 구매 다변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무기의 한국 판매를 유지하고자 하면서 미국 군수시장에 한국방산의 참여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무기의 공동개발을 추진, 한국 국방예산을 활용하려는 의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8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한국의 군비지출은 바로 이같은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1960년~1979년의 20년간, 국방예산이 국가예산과 국민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9.3%, 4.5%였습니다. 이것이 80년대에는 각각 35%, 6%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경제규모의 양적 확대에 따라 그 절대액 역시 70년대 중반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6년도 일반회계의 세출기능별 집행실정을 보면 사회개발비 1조 천억원, 일반행정지출비 1조 5천억원, 경제개발비 2조 5천억원, 교육비 2조 7천억원에 비해 방위비는 4조 3천억원입니다.

75년 이후 정수되기 시작한 방위비가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75년 14.1% → 79년 41.4% → 86년 44.3%) 서민들의 간접세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군 군사력 증강정책으로 다량의 최신에 무기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82~86년의 제 2차 병력증강계획에서 90억달러의 군수물자 중 절반을 미국에서 구입했습니다. 또 85~89년에는 80억 달러, 특히 88년 한해만에도 33억 달러의 무기구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한 내에 구축되어 있는 군사력은 이미 순수한 대(對)북한용이 아니라 대(對)소련용 군사력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로 무한히 팽창하는 '군사자본'입니다. 때문에 군축을 비롯한 정치·군사적 문제의 경우, 북한의 제안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북한을 상대로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한·미·일 삼각군사 동맹의 강화가 미국과 일본의 확고한 입장이고 남한 자체가 보유하는 군사력도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강화되는 군사력에 존재기반을 갖는 정권들이 '현재 있는 힘' 그리고 '앞으로 강화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가권력이 군수산업체의 강력한 영향아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군수산업이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 또한 막대하여 이들에게는 세계 도처의 긴장이 생명줄이고 긴장을 끝내는 평화는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한미간의 군사관계는 남북간의 대결을 유지하여 미국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본질때문에 극히 억압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미간의 법적 관계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국가권력의 최후의 물리력인 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넘어가 있고 방위조약을 비롯한 군사조약이 불평등한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특히 1978년 창설된 한미 연합사령부의 경우 작전통제권의 이양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와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78년 이후 미국이 요구해 온 '방위분담'이 행정협정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문제자체를 재고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삶으로부터 소외된 미국의 국가권력이 추구하는 비밀주의는 한반도에 적용되고 있는 군사전략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들이킬 수 없는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2) 핵전쟁의 위기

한반도는 이제 미국의 공세적 대소 전략이라는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종착점은 민족절멸의 위험을 안고 있는 핵전쟁의 무덤으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80년대 이후 유럽 또는 중동에서 충돌시 북한을 포함한 소련 극동지역을 선제공격하겠다는 동시다발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전략에 따라 핵사용이 가능한 미국의 사활적 이해지역으로 격상되었고 미국의 전술지침인 '공지전' (Air Land Battle) 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팀 스피리트 83에서 처음 도입된 '공지전'은 소련과 그 동맹국에 대한 배후 심장부 공격과 고도의 기동성을 중시하는 선제공격전략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특징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부터 강력한 타격을 가해 적의 균형을 깨뜨리고 계속 신속한 공격으로 적이 회복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팀 스피리트 83을 끝낸 후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는 필요하다면 북한의 깊은 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하여 주도권을 잡을 것이며 북한이 구축해 놓은 제 1, 2, 3방어선을 일시에 위협에 빠뜨리는 동시전투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83.6.23)

일본과 한국 주변의 '극동해역'에서는 이곳에 유럽전선의 제2전선을 전개한다는 미국의 동시다발전략에 따라 미·일해군의 전진공격체제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84년 이후 미해군은 전 군사력의 1/3을 동원하여 제2차 대전후 최대 규모의 훈련을 북서태평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팀 스피리트 87에서는 중성자탄을 발사할 수 있는 랜스미사일이 실전 배치되고 F16 핵전투기의 모의 대(對)북 공격이 실시되었습니다. 팀스피리트에 투입되는 병력은 76년 4만 6천명, 78년 10만 4천명, 84년 20만 7천명으로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은 미-일 공동작전

과 연계되어 육·해·공 3면에서 핵전쟁과 생화학전을 포함한 전면적 공세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미행정부는 그들의 국가 정책으로 선제공격전략을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핵사용의 결정자는 미 대통령이며 그는 미의회의 승인없이 60일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핵작전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작전계획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핵전쟁이 가능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더우기 미국은 최근 전쟁시 동맹국의 의무지원 사항을 제도화하는 전시협정 「전시주둔국지원협정」 (War-time Host Nation Support) 의 체결을 한국, 일본 두 나라와 동시에 협상중에 있습니다.

이는 전쟁시 또는 그 징후가 있을 때 전투부대 중심의 미 증원군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사항을 마련해 놓은 협정입니다. 영국의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전쟁시 투입되는 10만명 이상의 미군에 대해 민간징용노동력을 제공하고 필수물자의 징발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와 같이 전쟁시 동맹국의 계엄 선포권을 장악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준비해온 대소전략의 완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한반도의 평화구조 정착방안

우리에게는 외세의 군사력으로 민족내부의 대결을 강화하여 핵전쟁의 무덤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민족내부의 화해와 공존의 질서를 찾아 외세의 개입을 배제하고 민족 자주적 생존양식을 누릴 것인가 라는 두가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후자의 길을 찾는다면 다음과 같은 미래가 기다린다고 미국무성의 안보담당관리 맥도널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북한의 정규군을 합하면 1백 50만이 넘는데 통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수의 군인을 좀 더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방향에 이용할 수 있다.

둘째, 통일된 한반도는 우선 국내시장이 넓어질 수 있고

셋째, 북한의 광물이나 전력자원이 남한의 농업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네째,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 통일된 한반도의 정치적 지도력이 국제적 위신을 높일 것은 틀림 없으며

다섯째, 외국이나 외세에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며

여섯째, 통일된 한반도는 그와 비슷한 크기의 국력을 가진 나라들 가운데서도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일곱째, 통일된 한반도는 서유럽 어느 나라 못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비동맹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제3세계 나라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상은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진단으로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한국민족에게 여러가지 잇점을 가져올 수 있으나 미국의 국가적 이익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나 통일에서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미국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한반도의 절반만이라도 계속 현상유지해나가는 데 있다. 미국의 이익은 어떠한 변화도 방지한다는 현상

아래에서 보장된다.”

우리는 앞에서 미국이 말하는 바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너무도 위험한 현상변경입니다. 민족절멸의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의 지속속인 반입과 군비증강으로는 어떠한 현상유지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현상유지라는 명분으로 극동에서 전개되는 군사적 움직임을 보면서 지난 60년대 초 일본이 구상한 한반도 군사개입 작전 ‘미쓰야(三失) 계획’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 비밀계획은 한반도 유사시 남한을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북한을 공략하며 일본내의 혁명을 진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78년부터 미국 주도하에 시작된 ‘극동(한반도) 유사시 미일공동작전연구’는 바로 이 ‘미쓰야계획’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그 규모를 대(對)소 작전의 차원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미일군부는 지난 84년 ‘미일공동작전연구’를 끝낸 후 86년 최초의 미·일 육·해·공군통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주한 미공군이 참가하고 한·일간의 합대교류도 같은 해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과 소련간에 최초의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었고, 85년에 재개된 남·북간의 대화도 틴스퍼리트의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일본은 공동작전연구 완성후 86년 12월 ‘해상교통로 방위공동연구’에 서명하고 정부내에 ‘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여 일본 측의 ‘전쟁지회기구’를 구성했습니다. 안전보장회의는 일본 수상이 필요시 소집하여 초헌법적 대책을 시행하며 노동조합과 민주단체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일본의 군수제벌들이 그동안 비밀리에 진행되어온 군수생산을 공개하기 시작한 사실도 일본군사력의 해외투입이 임박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남은 작업은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미-일공동작전체제와 그에 수반하는 유사입법(전시동원체제)을 현재의 평화헌법과 대체하는 것입니다. 방위청이 주도해온 유사입법 연구는 87년 봄에 완료되었고 그 결과는 올해 드러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자위대 수뇌는 이제 ‘전쟁이 나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방위비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흐름속에서 앞서 말한 ‘전시주둔국지원’협정이 체결되면 극동에서의 전시체제는 완벽하게 꾸며질 것입니다.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에게 한반도가 또다시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언제라도 전쟁이 합법화될 수 있는 현재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전쟁재발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평화협정은 교전 당사자가 전쟁의 종료를 확인하는 협정이며 여기에는 적대행위의 종료와 점령군의 철수, 평화협정을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국제적인 평화보장 방법으로는 비무장지대의 국제적 감시, 상호불가침조약과 군축, 비핵지대설정의 국제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설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핵공격에 의한 공포와 위기의식을 배제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불가침선언은 남북간에 일체의 무력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이는 민족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방도로서 평화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규정 즉, 남·북상호간의 감군과 감축을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감시, 원조할 중립국 감시단이 일정기간 활동하면 그 누구도 분쟁재발을 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의 보장 방법은 휴전협정의 파기된 조항을 원상복귀시키는 기초 위에서 두 체제의 평화적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남북한간의 이념과 체제의 차이가 해소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분간은 우리의 감상적 희망에 불과하며 언제 돌발적으로 폭발하게 될지 모를 오늘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뒤에 통일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휴전협정의 파기된 조항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에 내놓은 다국적 군축협상안에서 대폭 완화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우선 이 제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국적 군축협상안은 88년 3월에 제네바에서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들을 업저버로 참석시켜 군축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 ① 남북의 무력을 88~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축소하고 92년 부터는 각각 10만 이하의 병력을 유지하는 문제
- ② 주한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남·북의 무력이 10만으로 축소되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을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철폐하는 문제
- ③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중립국 감시군을 주둔시키는 문제
- ④ 남북무력의 군축계획과 미군의 단계적 철수계획을 상호확인하고 이를 세계에 공포하는 문제 등이다. (87.7.23)

이 제안에서는 남한이 군사협상에서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남북의 군축 후에 단계적으로 철수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북한의 총리 이근모는 군축제안후 ‘무기감축협정이 이루어지면 민간경제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풀어줌으로써 경제적 문제의 태반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혀 군비부담으로 인한 경제난의 심각성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 87.12.7.) 그리고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통일문제에 관해 타협을 해서 두개의 한국을 인정할 태세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추측보도까지 낳게 했습니다.

북한의 완화된 제안은 미군 철수 후의 사태를 우려하는 남한의 일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 평화보장방안으로 확고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음을 80년 이후 급격히 벌어지고 있는 남북한의 군사력 격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살펴보면 미국의 군사연구소(ACDA)의 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남한이 무기수입면에서 북한의 2~3배(73~83년), 군수생산의 규모에서 2배, 군비지출면에서도 2~3배를 능가합니다. 군비지출의 경우 GNP상의 군비비율은 북한이 높지만 그 총량에서는 남한이 월등 많습니다. 무기생산의 경우 해·공군 무기체계에서 남한이 질적으로 우세합니다. 해군력도 함정수는 북이 많지만 전체 ton 수는 남이 우위고 장비면에서도 10년 가량 앞서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지상군을 전진배치한 것은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기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이며 지하요소는 북한내부에서의 장기전을 대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총체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은 육해공, 예비전투력, 동원자원, 지형적 불리함, 동맹관계의 성격 등으로 보아 전쟁을 통한 통일을 바랄 수 있는 능력은 없으며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통일로 전쟁에서 얻는 피해를 보상하려는 의지는 더우기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남북한통일정책의 전개과정과 자주적 평화통일론

이해영 (한국정치연구회)

1. 머리말

6월 민주화대투쟁을 계승하여 최근 전국적 규모에서 광범위하게 확산·심화되고 있는 현단계 조국통일운동은 진정 해방직후 민족이 분단된 이래 목적의식적으로 추진된 최초의 자주적이며 대중적인 통일운동의 시기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민족의 주체역량으로 해방을 전취하지 못한 까닭에, 민족적 생활에 있어 애초 하나이자 한몸뚱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국분단으로부터 자국의 이기적 실리를 얻으려는 주변열강들의 이해에 민족의 운명을 저당잡히면서까지 서로 다투어 온 것이 우리의 현대사였습니다. 그 단적인 표현이 한쪽은 '제국주의의 침병'이자 '미국의 전방초소'로서 다른 한쪽은 '사회주의의 동방초소'로서 스스로를 규정지는 남북한간의 無限의 군비경쟁과 核戰위협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현재 갈라진 민족은 영원한 결별이나, 아니면 재결합의 단서나마 개척·발굴하여 평화와 진보의 '사람사는 세상', 새로운 조국을 건설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어느 전망의 우세와 어느 세력의 有不利를 쉽사리 속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착동·교차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갖고 있는 지배적인 국제성의 구조로 말미암아 아직 강고한 중심으로 대단결을 이루어 내고 있지 못한 민족민주 세력이 외세와 지배블록의 방어막을 간단없이 타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역사는 현재를 매개로 미래속에 투영됨으로써만이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빌어 남과 북 그리고 민족민주운동세력의 통일문제를 둘러싼 경험의 궤적을 그려보고자 함도 이것을 통해 현시기 우리의 통일운동의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입안하고 나아가 미래속에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함에서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된 일정한 정세관과 목적성을 바탕으로 해방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의 통일정책사와 민족의 통일운동의 흐름들을 주요시기별로 간단히 서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 분단체제의 강제시기 (45년~53년)

민족주체역할이 아닌 外力에 의한 그것도 전승국이자 기본적 모순관계인 자본주의국가 미국과 사회주의 국가 소련에 의한 한반도 분할 점령은 이후, 시기 한반도 문제의 특수성을 규정지었습니다.

해방직후 민족통일문제가 정세의 전면에 부각되게 되는 것은 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의한 「조선임시민주정부」수립과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실시에 대한 결의를 계기로 해서였습니다.

여기에 이승만과 한민당계열 그리고 김구 중심의 임시정부계등 범우익은 당시 상황에서의 열

세를 반탁운동을 통해 만회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당파적'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비상국민회의」를 조직하고 신속한 대응을 전개해 나갑니다.

반면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진영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결성하고 '삼상회의의 총체적 지지'를 표명하여 이 「민전」을 통해 삼상회의의 미소합의기구인 「미소공동위원회」에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전국의 총선거로 「인민대표회의」를 소집하여 남북한 통일정권을 수립하고자 의도합니다.

그러나 46년 5월 제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자 이승만은 이른바 '정읍발언'을 통해 단독정부수립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물론 이는 미국의 의도를 국내적으로 대변해 낸 결과였습니다. 이승만과 한민당을 제외한 남한지역내 재정부들이 미군정에 의해 배제, 융합되는 과정에서 일시 '좌우합작운동'이 생겨나지만 실제 이 운동은 미군정의 장기적 구도였으며 한반도분단에 앞선 명분축적의 의미이상을 갖지는 못하였습니다.

47년 7월 제2차미소공위가 결렬되자 미국은 전후의 미소협조체제의 산물인 모스크바회담에서의 합의를 무시하고 한반도문제를 당시 미국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미국의 '거수기'에 불과한 유엔에 이관시켜 「유엔조선위원단」을 가결시켜 버리며 이로써 민족분단을 위한 대내외적 조건이 구비되게 됩니다.

이후 유엔조선위원단의 방한을 둘러싼 남한내 민족민주세력, 분단반대세력의 치열한 반대투쟁, 즉 '2·7 구국투쟁' '제주도 4·3 항쟁' '5·10 단선반대투쟁' 등 전국적 규모의 대중적 저항운동이 계기적으로 이어지지만 결국 미군정과 이승만일파의 물리력에 좌절되면서 5·10일 선거는 실시되었고 그해 8월 15일 남한지역만에서의 이른바 '유일합법정부' 라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 북한의 기본적 통일정책은 해방직후 김일성이 제시한 「민주기지노선」이 관철되고 이에 따라 일국혁명에 있어서 성공한 한 지역에서의 혁명을 공고히하여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담보하는 책원지로 삼는다는 구상이었습니다. 46년 2월 결성된 북한 임시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반제반봉건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실시되고 47년 2월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결성되어 '사회주의혁명'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인민정권'의 수립과 친일잔재숙청 및 토지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진주한 소련적군은 북한의 사회주의자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결국 48년 8월 남한에 정부가 수립되자 뒤 이어 9월에는 북한지역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분단의 구체적 위기에 직면하여 남북한의 각 통일지향세력이 단일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했던 48년 4월의 남북협상운동의 의의는 각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의의는 첫째, 민족통일운동사에 있어서 남북한의 제정당·사회단체가 망라한 정치협상방식의 최초의 자주적 평화통일운동의 첫번째 모형이자 정형이라는 것, 둘째, 일부 소수의 분단지향의 반민족적 세력에 의한 단선단정수립기도를 전면적이며 총의로서 거부하고 나섰던 점, 셋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 넘는 민족대단결의 첫번째 사례로 된다는 점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2지역에 수립된 2개의 이질적 정부간의 대립은 49년 남한내에서의 유격전쟁이라는 내전단계를 거쳐 50년 6월 결국 전국적인 확전으로 귀결됩니다. 곧 이어 유엔군을 자처한 미국군대가 개입함으로써 전쟁은 국제전화하게 되고 북한은 이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아 물론 그 결과 남북한 간에 외세에 의한 강제된 분단구조는 완전히 '봉인'되어 버렸습니다. 3년간에 걸친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민족통일방식의 전민족적 합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분단체제의 국내화 시기 (53년~69년)

50년대 남한정권의 통일정책은 대내적 선전차원의 '북진통일론'과 대외적 차원의 '유엔감시하 북한반의 총선거방안'으로 요약되며 이외의 모든 통일논의는 철저히 봉쇄되고 탄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50년대 북한의 통일논의는 대내적인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더욱 용이케 하기 위해 '정전의 성과를 공고한 평화구조'로 전환시킨다는 구도하에 제시된 '평화통일론'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대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로서 주목할 것은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러한 통일방안이 민중의 열망을 대변하게 되고 조봉암과 진보당이 이승만정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되자 정권측은 소위 「진보당사건」을 조작하여 결국 그를 '학살'해 버립니다.

50년대의 누적된 제반 모순이 민중의 광범위한 저항을 초래하면서 60년 4월 19일 발생한 4월혁명으로 이 정권은 붕괴되고 결국 4·19 이후 1년간의 「해방공간」을 통해 민중의 자주적 통일운동이 전면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 「사회대중당」등 혁신계 세력들은 당시 민주역량의 통일전선적 성격의 연합체였던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결성하고 '자주·평화·민주'의 통일원칙하에 반외세 자주평화통일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통일운동세력이었다던 학생운동측은 4월혁명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당시의 모순구조를 '통일세력 대 반통일세력'간의 모순으로 규정하고 '외세의존적 매관세력의 타도'에 힘을집중시킬 것과 남북한 학생회담을 요구하고 나섭니다. 그러나 '혁명없는 혁명과정의 완수'라는 의도속에서 남한 정세를 안정화시키려했던 미국과 일부 소수의 정치군인들의 쿠데타로 이 모든 시도와 요구는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박정희정권의 통일정책은 '선건설 후통일론'으로 고착되고 역시 일체의 통일논의는 봉쇄되어 버렸습니다.

60년대 북한의 통일정책은 남한에서의 4월혁명을 계기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내었던 시기였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60년 4월혁명이후 개최된 북한의 노동당 4차대회에서의 연방제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로서는 자주적 남북한 자유총선거방안의 차선택이자 과도책으로 제안된 것이지만 이 연방제 제안의 의미는 다음과 관련하여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즉 북한에서는 64년 이후 '3대혁명역량론'이 제기되는데 여기서 북한은 독자적인 역량으로 남한의 혁명역량을 언급하고 특히 '남조선인민'이 '주동'이 되는 '남조선혁명'을 별개의 과제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전의 '민주기지론'에서 보이는 남한민중의 대상화를 일정정도 극복하였다는 의미로 이후의 이른 바 하나의 「조선혁명」과 2개의 「지역혁명」론을 정립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4. 분단체제의 국제화시기 (I) (70년대)

70년대초의 남북대화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수립에 의한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역학의 제편의 결과 초래된 힘의 일시적 불균형의 산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미 접근을 기적으로 세계정세의 국면을 데탕트체제로 재편하면서 동북아에 있어서 힘의 퇴조를 중국-일본-미국으로 연결되는 3각구도로서 보전하려는 발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남북한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한반도판 데탕트구조를 이루어 정세 자체를 안정시켜 베트남민족해방전쟁에 따른 부담을 축소시킬 필요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과 남북한 내의 대내적 요구가 맞물리면서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이 탄생합니다. 여기서 합의된 조국통일 3원칙 즉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은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한 조국통일의 '대장전'이라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한간에 합의된 3원칙과 통일의 새기운들은 박정희정권의 유신쿠데타로 완전 좌절되어 버립니다. 박정권은 10월의 친위쿠데타이후 73년 「6·23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남북한유엔동시가입이 핵심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의 의미는 미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 방식이었던 독일방식 (German Formular)의 한반도판 즉, 다름아닌 '2개의 한국'(Two Korea) 정책이 국내적으로 관철되기 시작하는 공식적 선언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74년 8월에는 이른바 「통한 3원칙」이라는 것이 발표되는 데 여기서는 '남북한상호불가침협정'이 제안되기도 합니다.

조국통일 3원칙을 '주체사상의 승리'로 규정했던 북한은 이전의 통일정책을 집대성하면서 박정희의 6·23선언에 대응하여 동일 「조국통일 5대강령」을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은 긴장완화,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 대민족회의 소집, 남북연방제 (고려연방공화국), 단일국호 유엔동시가입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74년 남한의 불가침협정안에 대해 북한 미국간의 평화협정체결을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75년 4월 베트남에서 미국이 패배하자 남한정권은 일종의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하고 이후 남북간의 접촉과 대화는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버립니다. 이때 미국은 75년 9월 키신저의 유엔연설을 통해 남북한 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입, 휴전당사자회담등 2개 한국정책의 실질내용을 담은 제안을 하게 되고 이후 한반도문제의 주도권을 미국이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의 표현이 70년대 후반의 여러 종류의 회담제의 (3자회담, 3당국회담, 4자회담, 6자회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분단체제의 국제화시기 (II) (80년대)

80년대에 들어 조국통일문제는 전혀 새로운 양상을 보입니다. 우선 80년대 초 남북한은 이전의 각각의 통일정책을 정비하여 일정한 완결성을 갖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경우 70년 노동당 5차당대회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DDR)론」이 남조선혁명론으로 정립된 대회였다면 80년 광주민중항쟁이후 개최된 노동당 6차당대회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 통일방안이 확정되는 대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 6차당대회 중앙위원회 보고에서 김일성은 남한의 사회민주화와 긴장상태완화 및 전쟁위협제거, 미국의 '2개의 한국' 책동저지 및 내정 간섭중결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뒤, 연방제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현존하는 남북한간의 사상과 제도를 상호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남북한의 통일정부 즉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그 아래에 2개의 지역자치 정부를 수립하자는 비교적 간단한 구도를 갖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방정부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전민족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주권체이며 그 역할로서 '10대 시정방침'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연방제는 통일의 완결된 형태라는 점에서 이전의 연방제와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 것이며, 아 물론 80년의 연방제는 북한의 통일정책이 「1국가 2체제」 방안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측은 82년 1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으로 대응하는 데 그 골격은 민족통일협의회구성-통일헌법기초-남북한 자유총선거-통일국회·통일정부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2년 남한정권의 이 방안이 갖는 의의는 그것이 남한정권측 통일정책의 결정판이라는 것 이외에 다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즉 70년대 이후 미국의 한반도 문제해결구상이 비로소 완전하게 관철되고 있다는 것, 달리 말해 '분단의 영구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전제되고 있다는 점과 비록 원문에서 '민주·자유·복지'라는 애매한 통일이념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엄격히 말해 그것의 본의는 「현존유전체제」를 유지하자는 것, 곧 한마디로 '1민족 2국가'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84년, 북한은 70년대 말 카터정권이 제시하였던 3자회담을 역제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남한정권의 존재를 이전과 같이 옮겨버려 한정하지 않고 그 일정한 대표성을 승인하는 입장의 탄력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물론 84년-85년간의 일련의 남북접촉과 대화는 이 시기를 '제 2의 남북대화'라고 부를 정도로 진행되었지만 아무런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80년대 북한의 통일정책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남한의 군비증강 특히 핵전력화에 따른 위기의 식속에서 남북한간에 긴장완화와 군사문제의 선차적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이는 최근 북한이 제안한 일련의 회담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6. 대중적 통일운동의 등장과 현하의 「통일국면」

조국통일운동사의 견지에서 볼 때 80년대가 갖는 가장 큰 의의는 자주적 평화통일운동의 대중적 확산입니다. 80년 광주민중항쟁이후 남한사회변혁운동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 지면서 최근에 합의되고 있는 남한사회의 3대 변혁과제론, 즉 자주, 민주, 통일은 조국통일운동과 반미 자

주화운동, 그리고 선결과제로서의 민주화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일문제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인식하게 된 성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만합니다.

어쨌든 남한사회 민족민주운동내부에서 이루어 낸 이러한 일정정도의 합의과정속에서 몇가지 통일 방안들이 눈에 띄는 데 이를 테면 김영환씨의 연방제 통일안, 문익환목사의 통일안, 그리고 최근의 KNCC선언에서 확인되는 획기적인 제안등이 그것입니다.

아울러 최근의 '6·10-7.7-8.15'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았던 학생운동세력의 치열한 싸움들은 미국-남한정권의 위기를 일정정도 증폭시켰고, 통일문제 및 그 선결과제로서의 군사문제가 갖는 중대한 의미를 대중적으로 공유하게 만들었습니다.

7. 현정세와 통일운동 그리고 반전반핵평화운동 (결론에 대신하여)

남북한민중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남한정권은 88올림픽을 통해 획득할 지도 모르는 대북한 우위로서 북한을 포위하여 협상태이블로 유도하여 자신의 통일방안을 강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70년대 이후 미국의 일관된 한반도문제해결방식과 맞물리면서 분단영구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 현정세가 갖는 분단영구화의 위기성이 내재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시기 대내외적으로 조성된 정세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몇가지 요구되는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첫째, 조국통일운동은 대중운동이라는 것이 재차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대중운동으로 될 때만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중적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하며, 대중과 함께 실천하기 위한 공간들을 목적의식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로지 강고한 민주주체의 대중적 통일운동이 올바르게 있을 때에 비로소 '외세의 이용'(用外勢論)도 가능해지며 외세의 '보장'없이도 자주적인 조국통일의 전망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통일문제의 본질은 민족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현단계 조국통일촉진운동은 한반도의 남쪽에서 외세의 지배를 몰아 내는 민족자주화운동과 상호보완적이며 상호계약적인 관계를 가지며 그렇지만 기본은 자주화운동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단계 조국통일촉진운동은 한반도의 긴장구조를 평화구조로 전환시키는 것, 즉 반전반핵평화운동의 계기를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국통일의 내외적인 조건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민주화와 '북한바로알기운동'을 통해 反북한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남북한간에 아래로부터의 화해분위기를 조성할 것이 당연히 요청됩니다.

셋째, 평화는 결코 전쟁이 없는 상태라던가 현상을 유지하는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으로서 평화의 현실적 조건을 강화시켜 나가고 또한 전쟁의 실질적 원인을 능동적으로 제거하는 데로부터 획득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운동이 자주·민주·통일의 3대 변혁과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 역시 위의 사실로부터 주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평화운동이 가질 수 있는 남한의 민족민주운동상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제와 전망

이 승 환 (현대사 연구가)

I. '평화' 문제를 보는 시각과 한반도의 통일문제

오늘날 전세계의 진보세력은 매우 다양한 구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의 진보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각국민중이 처한 정치·사회·경제적 조건이 극히 다양해졌고, 또 각국의 변혁운동도 서로 다른 형태와 발전 정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를 크게 정식화하면 오늘날 세계의 진보세력은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변혁을 달성한 나라로서 이들은 낡은체제의 세계지위를 약화시키고 그 모순을 첨예화시키고 있으며 사회발전의 핵심적 요인으로 등장, 둘째는 자본주의 제국의 노동계급의 운동으로서 그 발전이 불균등하고 아직은 준비기의 역량에 불과하나 계속 성장하고 있음, 셋째는 민족해방운동으로서 낡은 제국주의 지배체제를 무너뜨리고,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주요 동력으로 세계변혁과정에서 그 지위와 역할이 급속히 신장하고 있음.) 그리고 이들 각 세력은, ① 평화 ② 독립 ③ 민주주의 ④ 사회적 진보를 과제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 대회의 주제가 되고있는 평화의 문제는 약간 우리에게 낯선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나 이 문제는 인류역사에 있어서 오랜 역사를 지닌 과제였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녔다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 기념이라는 말이며, 다른 과제와 마찬가지로 각 역사단계속에서 변화하는 내용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평화의 문제는 제2차대전 이후의 세계사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전후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성립으로 인해 전세계가 적대적인 양대체제의 투쟁과 경쟁 속에서 군사·정치·경제·사회적 반 평화상태가 세계적 규모에서 확대, 유지되고 있는 데서 보다 심각하게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대적 양대체제의 대립, 그 자체가 반평화의 본질적 요인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국주의에서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기적 성격을 지니는 오늘날의 세계사적 단계에서 낡은 제국주의 세계지배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제국주의 세계체제를 변화시키고 자주와 평등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려는 3대 진보세력에 대해 군사·정치·경제 등 각 방면에서 도발적 책동과 위협을 가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전쟁정책) 따라서 현

대에 있어서 평화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의 반동적 도발에 반대하는 문제이며 이것은 평화운동이 반제투쟁의 중요한 한 구성부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입증됩니다. 즉 오늘날 3대진보세력은 궁극적으로는 반제의 한 흐름으로 융합되어 서로간의 상호연관, 의존을 강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4대 기본과제 역시 그 목적의 상호연관성이 내적으로 밀접해지면서 반제국주의의 지향으로 귀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는 전쟁이 없거나 억제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정적개념이 아니라 세계적 긴장과 전쟁위험을 배태하고 있는 제국주의세계 지배구조의 극복 (그중에서도 특히 제국주의의 군사전략에 중점을 둘 때는 협의의 평화개념이 될 것이다)이라는 적극적, 동적, 투쟁적 개념입니다. (이때 군사균형평화론, 반공평화론, 핵우산하의 평화론 등은 그 계급적 본질이 국제독점체=군산복합체의 반동적 평화론으로서 그것은 현대의 이행기적 성격을 거부하고 되돌리려는 제국주의 세력의 평화론이며 현대의 평화문제가 본질적으로 반제의 문제라는 것을 호도하는 논리이다).

평화의 문제가 반제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라는 것은 특히 현대의 식민지-신식민지제국에서 평화의 문제를 고려할 때 더욱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식민지에서 반평화상태의 핵심은 제국주의적 분업체제에의 예속과 국제독점체의 착취와 수탈 및 이 착취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일국적 차원에서의 파쇼적 대리통치체제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반동적 군사블럭화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국주의 지배로 인해 민족적 자주성을 억압당한 상태에서 식민지민중의 지향과는 상관없이 강요된 것이며 따라서 식민지에서의 평화문제는 제국주의의 지배를 타도하고 민족적 자주성을 획득하는 민족해방의 문제와 본질적 관련을 지니고 있고 그 핵심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식민지 나라에서 평화를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며 민족적 자주성을 되찾고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존엄을 되찾기 위한 사활적 투쟁입니다.

이상의 관점에 입각할 때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평화문제 역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문제는 주지하다시피 식민지 일반의 문제와 함께 분단이라는 특수적 상황과 관련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날 남한은 미국과 그 대리세력인 군부독제의 식민지적 착취와 억압 그리고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분열과 전국토의 군사요새화 및 상시적인 전쟁위험의 세계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구조적 반평화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남한의 평화문제는 미국과 그 대리통치세력의 식민지적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는 민족해방의 문제와 동족상잔의 분단구조를 청산하는 조국통일의 문제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민족해방의 문제는 현단계에서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의 문제로 의화된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조국통일의 문제는 ① 한반도의 분단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남한 지배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점과 (후술예정) ② 또한 미국이 이 분단을 이용하여 민족분열과 대립을 조장함으로써 민주세력을 탄압하면서, 신식민지적 지배와 반공군사기치화, 군부독재통치의 합리화와 확대강화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남한의 자주화와 민주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니다. 즉 조국통일의 문제는 그 자체의 본성상 남한 자주화를 자신과 일체화된 하나의 과정으로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국통일지향세력을 '좌경용공'의 구실로 탄압하는 독재지배 체제의 타도를 민주화의 그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③ 반국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민족해방의 완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한의 자주화, 민주화문제보다 더 포괄적인 영역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통일문제는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반평화 상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이며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평화문제는 본질적으로 통일의 문제이며 한반도의 평화는 궁극적으로 조국통일에 의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II. 조국통일문제의 본질

조국통일의 본질적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조국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이요 전제입니다. 우리가 분단의 고통을 자각하고 조국통일의 절박성을 통감할 때 무엇보다도 조국통일의 기본 성격을 해명하는 데 우선적인 주목을 돌리게 됩니다. 조국통일의 성격을 제대로 밝혀내야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장애물을 가릴 수 있고 나아가 합리적인 통일방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문제가 특별히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통일문제의 성격에 대한 견해와 입장이야말로 통일과 반통일, 평화와 반평화세력을 가르는 근본징표중의 하나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추세와 깊게 관련됩니다.

분단의 대결구조를 이용하여 '북한의 침략위기'를 강조하고 그것을 빌미로 남한에서 식민지적 지배와 파쇼통치체제를 유지, 확대해온 미국과 친미독재세력은 겉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말하고 있으나, 이들은 결코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은 미국무성 관리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한국민족에게 여러가지 잇점을 가져올 수 있으나 미국의 국가적 이익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나 통일에서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한반도의 절반만이라도 계속 현상유지해 나가는 데 있고 어떠한 변화도 방지한다는 협상하에서 보장된다." 이들은 남북한의 증오와 적대감을 획책하면서 분단을 남의 자유민주체제와 북의 공산독재체제간의 대결로 선전합니다.(반공, 승공, 멸공의 구호가 예증). 그리하여 이들은 노골적으로 분단합리화, 고착화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통일불가능론, 통일신중론, 통일점진적 접근론 등을 내세우면서 분단영속화와 신식민지 지배의 유지를 피하고 있습니다.(이 체제우선론적 관점은 남북간 무제한 대결·경쟁→긴장고조→분단고착화; 무력통일론내재).

그러나 민족민주운동세력내에서도 그간 조통문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는데(예를 들면 분단=체제간 모순론, 선민주후통일론 등) 그러한 잘못된 이해가 발생한 기본이유는 첫째, '분단국가에서의 변혁'이라는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특수조건으로 인해 선형변혁이론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는 점과(주체적 해결만이 요구됨). 둘째는 반외세투쟁의 불철저성과 외세에 대한 철저한 인식의 부족(소위 '친미'(또는 비반미) 민주화의 논리가 행세). 셋째는 통일의 반쪽인 북한에 대한 인식의 비과학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반북이데올로기의 문제).

그러나 80년대 후반이후 남한사회변혁의 민족해방운동적 본성을 자각하고 지금까지의 반국적 시야에서만 사고했던 남한사회의 변혁을 전국적 시야에서 파악하게 되면서 또 북한을 그 사회의 내적발전논리와 사상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이 부분적이거나 가능하게 되면서 조통문제에 대한 인식이 본질적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고 남한변혁과 조통문제의 관련성이 올바르게 자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차의 실패를 거치면서 남한사회변혁의 근본문제가 민족해방의 문제임을 자각하게 된 이후(즉, "자주 없이 '민주' 없다"), 우리가 도달한 조통문제의 본질인식은 그것이 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전국적 차원에서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이며 ② 동사에 외세에 의해 일시적으로 갈라지면서 비롯된 남북간의 대립과 불신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①이 조통문제의 기본성격의 하나가 되는 이유는 분단과 분단유지의 근본원인과 관련된 문제이다. 일제와의 부당한 투쟁으로 자력해방을 성취한 한반도 민중은 8·15 직후 자주독립의 통일국가를 수립할 역량과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친일반동세력과 애국민주세력의 역량관계에서 볼 때).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 전체가 민족해방세력에 의해 자주국가를 건설하고 전후의 새로운 신식민지배체제에서 이탈할 것이 예상되자 황급히 소위 '군사작전상의 필요성'이라는 미명하에(38선 이남이라도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습니다. 그후 미국은 통일과 완전한 민족해방을 이루려는 남한 민주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친일반동세력을 중심으로 국가기구를 친미파쇼체제로 구축하고 예측적 군사·경제구조를 성립시켰으며 이들을 통해 남한에서의 미국의 영구적 지배이익을 보장받고 통일로 나아가려는 민주세력을 탄압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분단은 결코 민족내부의 체제, 사상 또는 지역대립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국제열강간의 대립산물 또는 전범국의 전후처리와 관련된 문제도 아닙니다. 조국의 분단은 장기적 항전을 거쳐 민족적 해방을 이룩한(그러므로 외세의 간섭이 허용될 수 없는) 나라의 반쪽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점령한데서 유래하는 것이며 그것이 심화되는 것도 결국 미국이 남한에서의 신식민지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반통일세력을 보호, 육성하고 통일세력을 탄압하고 나아가 남한을 완전한 반공군사기지(이것은 일제시대의 대륙병참기지와 동일)로 만들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대결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데서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통문제의 제1의 본질은 외세의 남한지배를 종식시키고 민족자주성을 획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남한 민주세력에 있어서는 이제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②가 조통문제의 또 하나의 기본성격이 되는 것은 통일을 곧 남북한 양자간의 먹고 먹히는 문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해 중대한 위기에 놓여있는 단일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단합을 회복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분열=분단은 우리 민족을 지배하려는 외세의 논리입니다. 우리 민족의 힘이 강하면 외세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민족이 갈라져 싸워야만 외세는 그 절반이나 지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민족내부의 분할통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과 북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조장

하는 민족분열정책, '두개의 한국' 정책 및 반공·친미사대주의의 유포가 미국의 신식민지배 경영의 주요 내용이라는 점에서 조통문제는 민족내의 불신과 대립을 제거하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통문제가 민족단합의 본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그것이 민족내의 당파적 이익보다 더 전면적인 문제라는 데서 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상, 제도, 이념, 지역의 차이 등을 넘어서서 전 한반도의 민중이 단결할 때 그 힘에 의거하여 외세를 물리치고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에서 제시한 조통문제의 양대본질은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절대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컨대 민족자주권확립이라는 측면만 보고 민족단합문제를 소홀히 하면 통일의 주체를 세우고 그 운동역량을 편성하는 데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역으로 자주성의 문제를 소홀히 하면 통일을 가로막는 '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격의 집중성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Ⅲ. 조국통일의 기본원칙과 방안문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기본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원칙은 조국통일의 입장, 방법, 경로 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분단 44년 이후 각기 상이한 처지와 조건에 놓인 전체민중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이해가 다른 각계 민중을 모두 조국통일의 실현에 주체로 나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972.7.4 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남한의 친미세력에 의해 스스로 북한을 협상태이블로 이끌기 위한 전술적 차원의 논리로서 부정되고 있지만)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민족전체의 지향, 요구에 맞는 가장 정당한 원칙입니다.

오늘날은 이 3대원칙과 함께 민주주의의 원칙도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조통문제가 민중의 의사와 관계없이 친미독재정권의 전유물로서 신식민지과소적지배의 술수로서 이용되어 왔으며 통일에 대한 민중의 자유로운 논의와 실천이 억압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조국통일은 외세의 간섭없이 5천만 민중 자신에 의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적 조건속에서 조국통일에 관한 전 민족의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통일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4대통일기본강령은 각당각파의 무수한 통일논의속에서 참된 통일방안과 미사여구로 포장된 반통일방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4대원칙에 입각한 통일방안만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다). 조통을 이루기 위한 현시기, 한국민중의 투쟁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확정시켜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① 자주성의 원칙

자주의 원칙은 외세에의 의존이나 간섭없이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우리 민족자신의 의사와 힘에 의해 풀어나가는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국통일의 본질의 하나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자주성을 확립하는 것이라 할 때 이 원칙은 조국통일원칙의 핵심이 되는 근본원칙이 됩니다. 이 자주성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할 기본이유는 첫째, 통

일문제가 민족내부의 문제이고 민족자결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세의 간섭이나 개입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며, 둘째는 조통실현의 주인이 우리 민족이며 그 힘도 우리 민중에 있고 따라서 이 힘에 의거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의 협의 또는 힘의균형을 통한 보장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주성의 원칙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자주성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외세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이 종식되고 또 그 외세의 대리통치세력과 그들의 매국적 책동이 타파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② 민주주의의 원칙

민주주의의 원칙은 조국통일의 문제가 정권담당세력을 비롯한 소수의 의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민중의 의사를 충분히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그들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이유는 첫째, 조통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민족내 일부 소수이거나 또는 조통문제가 당파적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모든 한반도 민중의 문제이며 모든 민중이 조통에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고 따라서 조통문제 해결의 힘도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조통은 민중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충분히 발양할 때만 민족적 이익과 대중적 요구, 실정에 맞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고 그 방안이 민중의 힘에 의한 권위를 지니고 힘있게 관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의 원칙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계 민중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보장되고 사상과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③ 평화의 원칙

평화의 원칙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동족상잔보다 평화를 지향하는 민중의 의사에 따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통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서로 자기의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자기의 제도와 사상을 강요하려 하면 불가피하게 대결과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간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는 모든 전쟁위협요소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④ 민족대단결의 원칙

이 원칙은 남북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사상, 제도, 신앙, 계급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통일문제가 특정계급층이나 당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민족이 단결하여 거족적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전민족적 단결만이 내외의 민족분열 책동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상의 4대원칙에 맞는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통일방안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의 민족이 2개의 체제를 용인하는 기초위에서 하나의 연방국가로 통일을 실현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이념, 제도를 용인하는 기초위에서 남과

북이 동등하게 통일연방정부를 구성하고 그 정부아래에서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는 남과 북의 지역행정기구를 두어 각기 자치를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이때 이 '연방정부'는 민족자주권과 철저한 민주주의, 비독방·중립의 성격을 확고히 견지해야 합니다. 이 통일정부의 성격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자주성인 바 이 자주성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2차 AA인민연대회의(코니올리회의)에서 규정한, 비독립 5개지표 ① 법령의 국민적 동의없이 국민이름도용 ② 외군, 군사기지지분 ③ 식민주의 공동체, 군사동맹 참가 ④ 정·군·경제·사회상의 계획실행에서 민족주권의 기능 재량행사 못함 ⑤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자유존중 안됨)의 철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1민족 1국가 2체제안은 자주-민주-평화-민족대단결의 기본원칙에 기초한 가장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입니다. 분단이후 40여년간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하에서 살아온 남과 북이 급격하게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남과 북이 서로 자신의 사상과 체제로 급속히 통일하려 한다면 대결과 충돌은 필연적입니다. 지금까지 남한역대정권에 의해 성역화되어 왔던 체제우위적 통일론(남한화통일)이나 또는 있을 수 있는 그 반대의 통일론(북한화통일)은 필연적으로 남북간의 무제한 경쟁, 대결, 군비확장을 초래하여 무한정한 긴장고조와 전쟁의 참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고 반공·반북이데올로기를 불길한 민족대단결의 기초하에 남과 북이 하나의 '연방국가'를 구성하여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세계 평화에 호세력이 요구하는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해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이 방안이 조국통일로 향하는 하나의 출발점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한에서는 이 1국가 2체제적 내용을 갖는 안으로서 김영환의 '연방제안'과 김중기의 '민족해방자주화와 연방공화국창설안'이 공식적으로 제출되어 있고 문익환목사의 '3단계 연방제 통일안'도 실제로는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DCRK안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안들은 모두가 완성된 형태를 취하고 있지 못하며 또 그 안의 정치군사적 선결조건, 통일연방정부로 가는 절차, 통일정부의 성격과 발전경로 등에서 여러가지의 비현실성과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발제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중의 어느 안이 정당하다, 아니다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만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목, 출발선이 1민족이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용인하면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밖에 없다는 점이며 이 입장에서 출발하여 전체 민중의 지혜와 창조력을 모을 때 비로소 가장 현실적 완성도를 지닌 통일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과 같은 2체제 1국가안과 다른 내용의 통일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범주화됩니다. 하나는 '국가연합'적 위상으로서의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2개한국'으로의 분단합법화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는 보다 더 기능주의적인 방안입니다.

전자는 김대중의 '공화국연합의 3단계 통일안'으로 대표되고 있는데 이 안은 체제우위적

통일론과는 질적으로 다른 진보성을 지니고 있으나 분단과 통일문제의 본질을 자주화의 문제와 철저히 관련짓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긴장이 완화된 분단상태의 고정화'로 귀결될 수도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는 '남북교차승인과 UN동시가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미국과 남한정권의 통일정책으로서 이것은 준전시상태인 휴전상태를 그대로 두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 전제위에서 남북의 '두개의 한국'을 국제적으로 합법화시키자는 안으로서 이 안은 통일보다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남한에 대한 신식민지적 지배를 국제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데 더 중점이 있는 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안은 통일정책이 아니라 '분단을 합법화, 영속화시키려는 반통일정책'입니다.

IV.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전제적 과제

그러나 이상 서술한 원칙적 방안에 따라 조국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해결과제가 존재합니다. 그 선결과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네개의 선결과제는 모두 자주-민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올바르게 관철시키는 데 필요한 필수적 과제이며 또한 이 4대원칙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과제입니다.

1) 외세의 내정간섭과 민족분열정책의 종식—이것은 자주성의 원칙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과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자주적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군사독재정권을 비호하고 '두개의 한국'을 조작하여 분단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계속 확보하려는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이 종식되어야 합니다.(미국은 남한의 신식민지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남한정권의 창출, 유지, 교체, 민중운동 탄압·분열 등 한국의 모든 정치과정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정치·경제적 지배와 간섭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한미행정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불평등한 제반 약속협정을 폐지하고 군작전지휘권을 회수하는 문제입니다. 제반 약속적 협정들은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과 지배 및 남한의 미군에 대한 사실상의 영구조치를 보장하고 있는 치욕적 문서들입니다. 또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전 주한미군사령관 R. 스틸웰의 발언)로 불리는 군작전권 이양은 한반도에서 우리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군이 핵공격과 선제(북침)공격을 실행할 수도 있는 '박탈된 자주성'의 상징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을 항구화하기 위한 미국의 제반 내정간섭제도와 기구, 민족분열정책은 자주적 평화통일의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2)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하는 제반 반민주적 기제의 철폐—이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과제이며 민족대단결을 보장하는 과제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남한의 역대독재정권은 미국의 자원과 민족분열정책에 편승하여 민족내의 대립과 반목, 이간을 조장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들은 반공·반북캠페인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통일지향세력을 좌경·용공으로 가혹하게 탄압해 왔습니다. 따라서 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계 민중의 의사를 자유롭게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① 각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완전히 보장되고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양심수들이 완전석방되어야 하며

② 통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의 철폐와 안기부, 보안사 등의 파쇼폭압기구의 해체 및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친미독재정권의 안보와 민주통일운동의 탄압을 위한 사병화로 전락시키는 전경제도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통일적인 친미독재정권은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는 진정한 민주정부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민중이 주인되지 못하는 반통일적 독재정권과 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주적 계기구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정치활동이 억제되는 한 민족단합과 통일은 요원할 뿐입니다(이 문제는 민족성원내 반통일세력의 척결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3)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전쟁위험의 제거—이것은 평화통일의 원칙에서부터 우리나라는 과제로서 참된 자주화와 민족대단결을 보장하는 물적 기초가 됩니다. 현재의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무한정한 군비경쟁과 인적, 물적 소모를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남한에 있어서 민주수탈적 고도성장노선은 이 분단상태의 군사적 성격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가공할 전쟁위험을 상시로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단의 주된 본질을 이루고 있는 군사문제의 해결 없이는 남북간의 신뢰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가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문제를 제쳐두고 아무리 대화와 접촉을 해 봐야 그리고 여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봐야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년래의 수차례의 남북대화가 그 어떤 실질적 긴장완화조치를 산출해 내지 못했던 주된 이유입니다.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결정적인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①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개를 합법화시킬 수 있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준전시상태를 종결짓고 평화체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평화협정의 체결은 한국전쟁이후 계속된 전시상태를 종결하고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그리고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남한을 포함한 3자회담을 개최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은 이 협정의 의무대로 '더 이상 남한에 주둔할 이유가 없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합니다.(일부에서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을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은 한국전쟁당시 정규군으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의용군으로써 지원, 참전한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전쟁당사국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한반도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 간섭하거나 할 의사도 없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이점이 미국과 전혀 다르다.— 굳이 4자회담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3자회담은 한반도의 군사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방도입니다. 미국과 남한당국은 더 이상 3자회담을 회피하지 말아야 하며 통일의 최대핵심인 군사·정치적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② 있을 수 있는 남북한의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남북상호불가침조약(선언)을 체결해야 합니다. 평화협정이 한반도의 군사긴장해소를 위한 외세와의 문제해결이라면 불가침조약은 민족내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입니다. 남북당국은 통일문제의 핵심인 정치·군사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즉각 상호합의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상호감군과 군비축소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족간의 적대위험이 현저히 해소되

고 상호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불가침조약체결이후 초기에는 남북간 불신이 완전히 정산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로 하고 중립국 감시군을 두어 남북간 무력충돌을 감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남한당국은 남침위협 등의 반복캠페인 대신 남북간 군사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상호불가침조약의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③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의 철거와 대규모 군사훈련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서유럽을 제외한 유일한 미핵무기 배치국'(S. 구스)으로서, 확인된 것만도 약 1,100여기의 핵탄두가 들어와있습니다. 남한의 핵배치는 '핵우산하의 남침저지'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으나 핵배치지역이 가장 핵전쟁위험이 높다는 것은 오늘날 군사문제의 상식일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남한의 핵무기는 전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핵무기는 한반도의 긴장을 확대하고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의 동시다발 보복전략에 따른 한반도의 초토화를 가져오는 제앙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핵전쟁을 상정한 종합군사훈련인 TS 훈련의 내용에서도 증명됩니다. 한·미·일삼각군사동맹체제속에서의 TS 훈련이나 핵기지화는 한반도 긴장고조의 요인이며 평화통일의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준전시체제하에서 핵으로 무장하고 선제공격을 포괄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간 화해와 신뢰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4) 남북민중간 자주교류의 완전한 실현

이것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부터 우리나라는 과제로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고 자주주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남한정권은 학생회담등 통일논의와 자주교류운동이 급속히 확산되어가자 '통일관련창구정부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고착, 반통일로 일관해온 남한정권이 북한관련창구를 독점해서는 결코 안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반통일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상 통일의 주체로 나설 자격조차 없습니다. 조국통일은 전 민족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이며 전 민중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의 각계각층 민중간의 다양한 자주교류는 통일로 나아가는 현실적 방도입니다. 자주교류는 남북민중이 '증오와 허위의식'에서 벗어나 서로의 처지와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여 화해와 민족대단결을 밀어붙여 실현하는 방법이며 또한 통일에 대한 남북민중의 지혜와 창조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주교류는 남북민중간의 민족적대단결전선을 형성하는 초석이 됨으로써 조국통일을 민족 자신의 힘으로 이룰수 있게 하는 역량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자주교류가 통일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류와 논의의 내용이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자주교류운동을 총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자주교류의 과정에서 통일문제의 핵심인 정치·군사문제(앞글 ① ② ③의 내용)에 대한 전체 민중의 의사와 요구가 논의, 결집될 수 있어야 하며 또 자주교류를 통해 확인된 전체민중의 의사를 총괄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합니다. 곧 자주교류는 반드시 남북의 각계각층 민중을 그대로 대표할 수 있는 각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연석회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며 그 속에서 정치·군사문제를 포함한 각

계 민중의 의사와 요구가 민주적으로 논의, 검토,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조국통일 앞에 놓인 중대한 문제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해가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따라서 남북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는 민족성원내 반통일세력인 매관정권을 배제하고 조국통일을 민중의 의사에 따라 풀어나가는 기본방도이며 자주교류의 최고형태입니다.

V. 조국통일운동의 의의와 수행원칙

그러나 이상과 같은 통일의 전제적 과제는 결코 저절로 해결되거나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분단을 가져오고 남북대결체제를 형성시키고 그를 통해 남한에 대한 정치·군사·문화·경제적 지배체제를 확립하여 막대한 이익을 향수해온 미국이, 더구나 남한을 세계전략의 사활적 거점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모든 예측협정을 일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핵무기와 주한미군을 순순히 철수하려 하겠습니까? (한반도가 통일되거나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곧 미국이 남한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미국이 남한에서 향유하던 이권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되며 나아가 태평양지역을 자신의 진영에 묶어두려는 전략이 파탄되어 45년 이래의 제국주의 종주국의 지위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 미국의 지원과 민족분열정책에 편승하여 남북대결체제와 그 이데올로기를 통해 지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의 매관세력이 어떻게 순순히 파쇼폭압기구를 해체하고 '철벽' 분단 구조를 파괴시키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친미매관세력이 통일로 향하는 한국 민중의 투쟁을 철저히 탄압, 봉쇄하는 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통일의, 특히 정치·군사적인 전제조건적 과제를 실현하고 조국통일로 나아가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반통일세력(미국과 친미매관세력)과의 지난한 투쟁의 문제이며 그런 의미에 한국 민중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반외세반독재 민족해방 조통운동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형성한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단결과 자주화를 이루는 조국통일운동은 한반도에 있어서 변혁운동 최대의 당면과제이며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실현하는 역사적 투쟁입니다. 조통운동은 민족해방과 민주주의를 향한 남한 민중의 변혁운동의 경로를 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한 민중의 변혁운동을 발전, 추동하고 그것을 자신의 필수적 전제로 하여 발전해갑니다.(조통운동과 남한사회변혁은 그 개념, 지역범위, 동력에서 서로 다르나 목적과 대상이 동일). 협의의 의미에서도 조통(촉진)운동은 남한 민중의 자주화운동을 선행과제로 하고 민주화운동을 토대로 하여 발전하면서 동시에 자주화운동의 폭을 확대시켜주고 대중적 토대를 튼튼히 해주며 민주화운동의 길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조통운동은 남한 민중의 뿌리 깊은 반북대결의식, 친미사대주의를 극복하고 민족화해와 동질성 의식을 갖게하며 민주주의와 민중생존을 유린하는 원인이 '분단을 이용한 미국의 신식민지배'에 있음을 인식케 함으로써(이를 통해 민중은 참된 '민족자주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자주화, 민주화운동 발전의 최대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주화, 민주화운동을 엄호, 발전케 하는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적이고 범민족적 차원에서 당면 최대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완수하고 남한의 반외세반독재투쟁의 발전에도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조통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적 문제를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의 몇가지 문제는 조통운동을 발전시키는 참된 힘과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사항입니다.

① 조통운동의 주체문제

조통운동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운동의 주체를 올바르게 규정하고 편성하는 일입니다. 주체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조통운동 동력을 획정하고 이들을 과학적으로 배치하는 운동의 전략문제와 당면의 전술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주체문제 인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체제대립의 이면에 있는 통일지향세력 대 반통일세력의 대립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근거해 북한 민중을 '처부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통일의 주체의 절반'으로서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통일지향세력이 반통일세력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민족내 사상, 제도, 지역, 당파적 이해를 떠나 거족적으로 단결하는 민족대단결전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그 내부의 역량편성과 영도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된다). 이 민족대단결전선은 내외의 민족분열책동을 무력화시키고 통일주체를 조직적으로 묶어세우고 그 역량을 최대화하는 데 관건이 됩니다.

그리고 주체문제에서 반드시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해외동포' 문제입니다. 해외동포는 그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구성에서 매우 다양하지만 민족의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 해외동포들은 그 자신이 남북민중과 함께 민족대단결전선의 중요한 한 구성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조국통일을 지원하는 국제지원역량을 발동하고 국제연대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또한 내외의 민족분열주의자들에 의해 크게 왜곡되어 있는 남북한의 실정을 객관적으로 전파함으로써 민족분열정책을 파탄시키는 데서도 각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주체의 한 부분입니다.

② 조통운동의 대적성을 명확히 하는 문제

이것은 ①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며 또한 조통운동의 배합문제와 관련된 문제이다. 조통운동은 본질적으로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과의 투쟁이며 따라서 조통운동의 대상은 명확히 미국과 친미매관세력입니다. 따라서 조통운동은 자주화, 민주화운동과 긴밀히 배합되어 전개되는 운동입니다.

조통운동이 자주화, 민주화운동과 올바르게 배합되어 전개되지 못하게 되면 조통운동의 대중적 발전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통일세력과 민중과의 명확한 대립전선을 형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통운동은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의 명확한 대립점을 이루고 있는 정치·군사문제를 중심적 내용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 조통운동에서 이러한 대적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조통운동의 성과는 오히려 '통일·북한카드'를 이용해 파쇼지배를 안정화시키려는 미국과 군부독재세력에게 약탈당하고 말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민주세력의 독자성과 주도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외세를 활용해야지 반

미로 나가서는 곤란하다'는 논리를 펴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일제하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자치론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허구적 논리입니다.

③ 조국통일운동의 대중노선문제

조통운동을 대중운동으로 수행하는 문제는 그 본질이 ①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②의 문제와 짝을 이루는 문제로서 양자의 어느 한쪽만이 강조되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좌·우편향초래).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이 조통운동 역시 대중을 주체로 하여 그 힘에 의거하지 않으면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조국통일운동에 대중을 광범히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적 정서와 의식수준에 맞게, 대중의 현재의 역량에 부합하는 운동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통운동을 각계각층의 이익과 관심과 결부시켜 다양하게 전개하는 것과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술의 개발, 통일의 절박성, 당면 조통운동의 내용과 목표에 대한 홍보에서 그 상투성을 극복하고 질을 대중적으로 발전시키는 문제 등이 깊이 연구,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 대중의 반복의식과 사대의식을 민족자주의식으로 변화시키는 다양한 교양활동(북한, 미국바로알기; 영화, 슬라이드, 연극, 노래……)의 전개는 조통운동에 대중을 주체로 나서게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이것은 조통운동이 분단·반공구조의 '철벽'에 파열구를 뚫어줌으로써 각계각층 민중운동을 반공모략으로부터 엄호하여 그 토대와 기반을 발전시키게 한다).

④ 조통운동 수행에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국제지원역량을 발동하고 이들과 적극 연대하는 문제입니다. 조통운동의 국제지원역량은 3대진보세력을 포함한 전세계의 반제·평화운동역량입니다. 한반도의 자주화와 통일의 실현에서 국제연대가 성립되고 그것이 중요하게 된 기본이유는 그것이 세계적 군사긴장의 한 근원을 해소하고 미국의 사활적 거점을 그 지배로부터 이탈시킴으로써 자주와 평등에 입각한 새로운 세계질서로의 이행을 급속히 추동시킬 수 있다는, 한반도의 통일이 갖는 세계적 지위의 중요성 때문이며 또한 그 운동이 세계제국주의체제의 맹주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세계반제역량과 본질적 이해를 같이하고 있고 또 힘을 합쳐 함께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자주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한국민중의 투쟁에 대한 세계진보세력의 지지와 연대는 미 지배세력과 친미독재정권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한국민중의 투쟁을 고무하고, 아직 합법화·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통일운동을 국제적으로 엄호하고 반공공세를 이완시킴으로써 조통운동 발전에 대단히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Ⅵ.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세계사적 의의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의 세계사적 의의에 대해 간단히 서술해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갖는 세계사적의의는 결론부터 말하면 제국주의의 세계적 긴장고조와 전쟁책동을 파탄시키고 세계평화의 수호와 세계적 변혁운동의 촉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한반도의 통일이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변혁운동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도 매우 절박한 과제라는 말입니다.

물론 한반도의 통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을 통해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통일을 향한 한국민중의 투쟁의 지도이념과 사상, 운동이론 그리고 그 주도권의 소재와 경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그 상(像)과 세계사적 의미는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앞에서 말한 의의는 한반도의 민족해방자주화통일이 갖는 일반적 의의라 할 수 있는데 한반도 통일의 세계사적 중요성과 세계변혁운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다소, 대소는 그 투쟁의 성격, 내용, 전도에 따라 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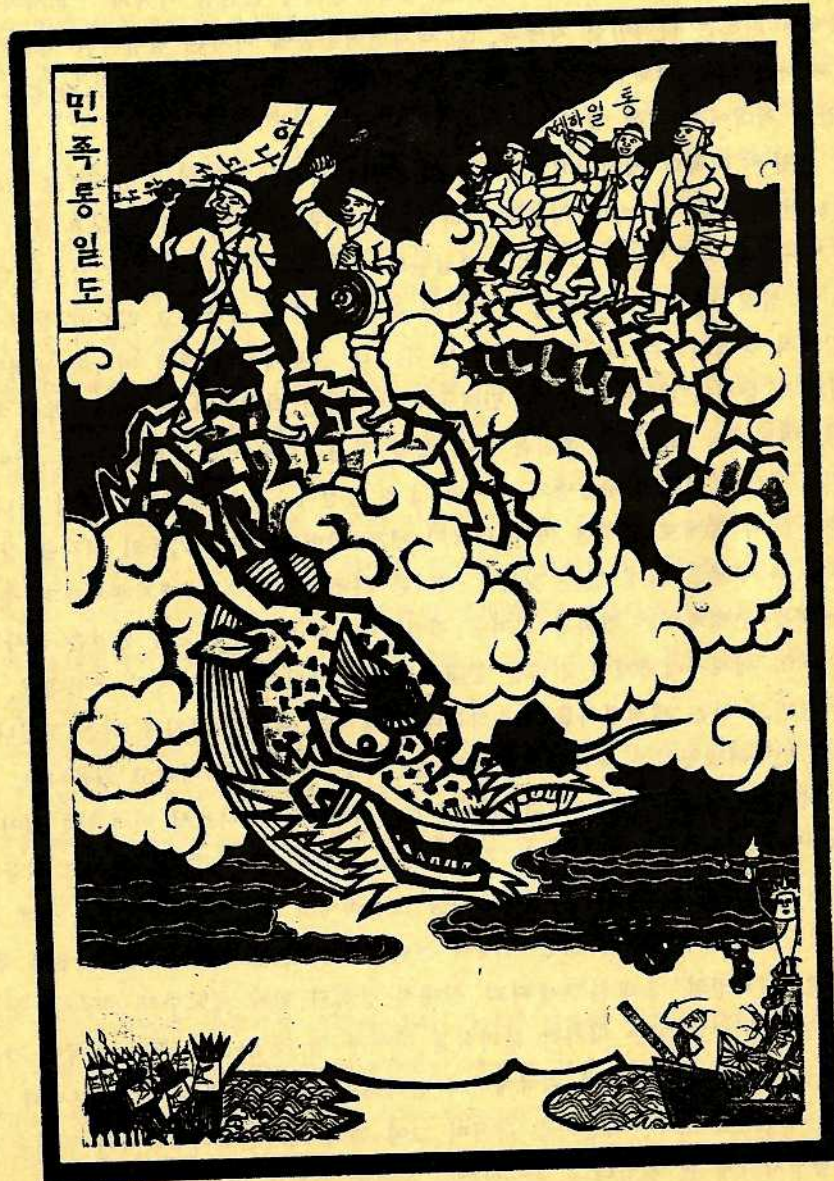
한반도의 통일이 갖는 세계사적 의의는, ① 세계반평화의 근원인 미국의(군사차원을 포함한)세계지배체제에 가하는 타격이란 차원과, ② 세계변혁운동에 미치는 영향이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후자는 다시 세계변혁과정의 3대진보세력의 성장, 강화에 미치는 영향과 4대 기본과제의 투쟁전선 확대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미국의 세계지배체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지위의 중요성으로 인해 미세계지배체제와 그 전략의 실현에 아마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①「한반도의 분단고착화=‘두개의 한국’전략」과 ②「전남한의 반공군사기지화전략」을 기초로 ③「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여 ‘국지적 통합전략’을 실현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이 강력한 군사정치적 동맹체제는 서유럽과 함께 ④「3대 진보세력에 대한 미국의 반혁명체제의 기동의 하나」이자 동시에 ⑤「제3세계 민해운세력에 대한 각개격과 전략의 강력한 후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①과 ②를 직접적으로 타격, 파탄시키는 것이 되고 따라서 PA체제의 가장 모범적 하부동맹의 하나인 ③을 결정적으로 와해시키는 것이 됩니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은 ④와 ⑤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이 세계 반혁명체제의 기동의 일각을 상실케하고 각개격과의 후방 한 부분을 잃게 만들 것이며 이러한 사태는 미국의 세계지배체제의 축소화와 전략의 전면적 변화를 초래케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군사적 대결을 기본으로 한 미국의 세계지배체제와 전략을 증대하게 파열시킴으로써 미국의 군사대결, 전쟁정책에 의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반도의 민족해방통일은 세계변혁운동의 발전에도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사활적 이해지역이며 ‘신식민지의 대표적 성공사례’의 하나로서 미국측에 있어서 체제간 경쟁의 ‘간판’이자 동북아지배의 거점, 자본수출의 집중국 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지는 미측 진영내에서의 이러한 지위(가장 모범적이고 중대한 종속국)로 인해 한국에서의 민족해방조통의 실현은 미 중심의 낡은 체제의 전반적 위기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세계변혁과정의 3대진보세력의 상대적 강화와 함께 제국주의 진영과 진보세력간의 세력관계를 역전시킬 수도 있는 역사적 분기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강력한 친미 지배통치구조를 구축하고 있던 한국에서의 민족해방조통의 실현은 3대진보세력 중에서도 민해운을 가장 극적으로 고무, 촉진시킬 것이며 그에 따라 세계변혁과정에서의 민해운의 지위와 역할을 크게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 한반도 통일의 실현은 앞서 말한 2가지 이유로 인해 4대기본과제를 위한 투쟁전선에서 특히 독립을 위한 투쟁의 진전과 또한 평화를 위한 투쟁의 진

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민중의 투쟁은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그 투쟁의 특수성과 강고성을 지니고 있고 그로 인해 그 투쟁의 과정은 세계변혁운동의 사상, 이론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상, 운동이론의 축적·발전의 보물고가 될 것이며 그 투쟁과정에서의 한국 민중의 (이미 보여주고 있는) 높은 투쟁성과 '자주성의 회복'을 향한 불굴의 전투정신은 세계역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자랑스런 한 장을 수놓게 될 것입니다.



- 약정토론 -

질문① (김홍규氏)

; 저는 허광氏에게 4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남북한에 있어서 과거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는 그러한 질문인데- 저는 실제로 남북한에 있어서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던 계기가 3번있었다고 봅니다. 첫번 계기는 휴전직후 정치회담의 시기, 둘째번 계기는 국제적으로 70년대 데탕트의 시기가 왔을때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었던 계기, 그리고 세번째가 바로 80년대 신데탕트가 전개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번째와 세번째, 국제적 데탕트의 시기에 남북한의 관계는 긴장완화의 구조로 간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열한 군비경쟁을 야기하게 되며, 특히 70년대 데탕트를 계기로 해서 남한의 방위산업이라든가 군수산업이 팽창하며 이로인해 북한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낄정도가 됩니다. 과연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현재 운동세력의 성장이 통일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써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남한정부의 현재 통일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88년 3월 현재 북한은 군축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된 형태이고,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정부는 여전히 비타협적인 정책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주된 논리는 '남한 군사력이 현재 북한의 65%수준이고 따라서 우리가 그에 상응하려면 90년대 중반은 되어야 한다. 따라서 90년대 중반 이후에나 즉, 우리가 완전히 해게모니를 장악하고서야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수 있을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경제력의 격차도 상당히 심화될 것이다.'는 것인데, 이러한 남한 정부의 기본정책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은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번째 질문으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불가침 선언'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남한은 계속 '불가침 협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니고 있는 함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네번째 질문은 허광氏가 얘기한 '핵전쟁의 위기'부분과 관련됩니다. 미국이 최근에 전개하고 있는 동시다발전략과 공지전 전략이 한국에 채택되면서 그리고 이 공지전전략이 북한에 대해 대단히 공세적인 전략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북한은 이에대한 심각한 위기의식 속에 84년·85년 대량의 무기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전략은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체제 혹은 상각군사동맹체제를 전제로 하는 대소전략의 일환으로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시 주둔국 협정체결 협상 역시 마찬가지로 한·미·일

과 소련사이의 상호 적대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변화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를 보면 크게 2가지 양상이 교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는 중국의 4대 현대화노선과 소련의 시베리아 개발계획에 따른 긴장완화의 조짐들로서 이는 평화구조에로의 대단히 좋은 호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신 기구라든가 혹은 조직·제도 혹은 일본의 상대적인 팽창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미국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일본이 점차적으로 한국에 대해 그 영향력을 팽창해 나가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현재 대결과 평화의 2가지 양상이 교차되고 있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과연 핵전쟁의 위기구조는 점차 강화되리라고 보여지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또한 이 상황에서 우리 평화운동이 추구할 가장 올바른 노선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①(허광氏)

첫번째, 평화의 계기가 3번 있었고 그 첫째로 54년도 정치회의를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핵전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전협정의 4조 60항에는 휴전협정이 발효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치회담을 열도록 권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54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정치회담 자체가 지연된 배경에는 2가지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치회담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측과 북한·중국측과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내용을 보면, 정치회담의 참가국에 미국은 중립국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고, 반대로 북한과 중국측은 중립국을 참가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타협을 보지 못하고 계속 난항에 빠져 결국에 가서는 세계여론의 압력을 받아서 UN이 타협안을 냈는데 그것은 중립국을 참가시키되 단, 전체회담에서 결정된, 각 문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중립국은 권리가 없다고 못박는 것으로써 타협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련도 중립국에 넣어야 한다고 북한과 중국은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공산측의 일원으로서 소련을 참가시키는 것으로 또한 타협을 봤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이유는 협상의 형식인데, 중립국이 배제됐을 때는 정치회담 자체가 이미 그 결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회담을 어떤 형식으로든 성사를 시켜서 정치적 타협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사를 가질 때에는 중립국을 반드시 참가시킬 수 밖에 없고 또 전후 평화조약에 있어서 국제적인 사례는 반드시 중립국이 참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UN군이 이러한 타협안을 넘으로 해서 그 정치회담의 올바른 결정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UN군 감시하의 총선거를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적어도 중립국이 감시해야 하며, 때문에 UN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UN군은 엄연히 교전당사국인데 어떻게 전쟁당사자가 선거를 감시하는가 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미국이 인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로 인해 휴

전체제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정치회의의 계기가 있었는데 왜 이것이 안되었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1953년에 체결된 한미방위조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한미군은 영구히 주둔할 수 있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역에 걸쳐 주한미군기지가 설치될 수 있다고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휴전협정 조항에 명시된, 완전한 평화체제가 되기 전까지 쌍방은 휴전협정의 조항을 수정할 수 없고, 적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무력증강을 할 수가 없고, 외부로부터의 무기반입을 할 수가 없다는 방위조약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이렇게하여 첫번째 계기는 완전히 파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70년대 데탕트의 계기는 미국과 중국의 화해가 그 핵심인데 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봉쇄를 풀었는가 하는 것은 곧 베트남사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베트남사태에서 64년 이후 미국이 한국군마저 투입해서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패배의 수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는가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과 타협을 본 것입니다. 마치 현재 2개의 한국 정책을 추구하듯이 미국은 베트남에서 나오는 조건으로서 '베트남 사태의 월남화(한반도에 대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분단된 상태로의 2개의 베트남정책)'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결과는 곧바로 북베트남에 의해서 통일되었을 때 전쟁이 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베트남 전쟁당시에 중국과 북베트남과의 관계가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틈이 있다는 것을 미국은 알고 비밀의교를 벌여서 데탕트를 운운한 것입니다. 이것이 2개의 한국으로 합법화하자는 것으로 한반도에 적용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바로 7.4공동성명으로 나왔지만, 뒤이어 6.23선언이란 것이 나타나 UN을 통해 2개의 한국을 합법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 합법화의 조건은 휴전체제의 유지이며, 그 휴전체제의 유지라는 것은 미국의 군사적 이해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 긴장의 완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번째, 80년대 신데탕트는 네번째 질문인 대소적대 안보관계에 연관되기 때문에 그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으로는 한국통일정책에 있어서 군사력 비교의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기에는 북한이 적화야욕을 품고 있고 따라서 무력도발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어떤때가면 북한을 초전에 박살낼 수 있다고 아주 자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이후에 가야 군사력이 균형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000년대까지 가야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군사력을 증진해야 하는 이유는 신뢰관계가 회복안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얘기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신뢰회복이란 무엇인지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Team Spirit를 참관하라'는 것, 즉 모든 군사훈련을 하되 그것을 서로가 구경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문제가 아니라(더우기 북한, 중국, 소련에는 이러한 대규모 훈련은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같이 지켜 봄으로써 신뢰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나 나토측이 바르샤바측에 제안하고 있는 군사적 신뢰조치이며, 기존의 협상을 추진하고, 그 대결상태가 어떻게 강화되든 그것에 대한 제한은 있을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계속 군사력이 열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미 70년대, 80년대, 90년대 또 90년대 가면 2,000년대, 2천 100년대 등으로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가침선언과 협정의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당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평화협정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관련되어서 입니다. 그러니까 74년까지 북한은 분명히 남한에 대해서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해왔는데 그러다가 74년에 비로소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정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랬던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휴전체제의 향방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평화체제로 고치고자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가이고, 이것이 곧 불가침협정인가 불가침선언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74년까지 남한에 제의한 평화협정은 거기에 미군의 감축문제도 다 포함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불가침협정의 내용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6.23 선언과 동시에, 2개의 국가로서 UN에 가입하고 휴전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는 제안이 나오면서, '협정'이라는 것이 국가간의 관계에서 맺는 조약과 같은 의미로 얘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뒤로 북한은, 남한정부가 현재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이상 2개의 국가로서 인정되는 협정이나 조약은 분단을 영구화할 뿐이라는 생각하에 절대로 조약이나 협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번째 문제에 대해선 저 역시 계속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인데, 군사적 강화의 움직임과 한편에서 (첫번째 질문중 세번째 제기인) 신데짱트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중소문제를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핵심이 되는 중국과 한국간의 문제는 지난 10년간 진행이 되어왔고 지금은 전면적으로 확대될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앞으로 4~50년간 중소관계가 한중관계와 같은 그러한 협력의 확대관계로 돌입할 수 있겠는가 또한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한중관계가 가능한 것은 미국이 중국대륙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풀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미국이 소련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풀것인가, 또 미국이 소련에 대한 그런 봉쇄를 풀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미국내에서의 의견은 지금 반드시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미국의 금융자본가들은 소련과 동구권에 대해서도 상업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소련에 대해서는 한달에 약 5~6억달러, 동구 사회주의권 전체에 대해서는 약 30~60억달러의 차관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것이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적 봉쇄를 주장하는 그룹은 전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미국의 대소봉쇄망이 풀어질 수 있을 것인가, 또 미국내부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세력이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하는 문제에 관련이 된다고 봅니

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소간의 군사적구조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풀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80년대부터 진행된 소위 중거리 핵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제공격을 하는 쪽이 이긴다는 전제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리적으로 소련을 포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해상에서의 무기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때문에 현재 필리핀이나 유럽남부 곳곳에서 미군기지가 철수되고 있는 한편에서는 해역주변에서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련은 현재 긴장완화 제안의 일환으로 북구지역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을 지금 완전히 중지하고 있으며 이것을 유럽의 반핵평화운동과 연결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바로 올해 6월에 캐나다·서독·미국의 3자 합동군을 창설하여 노르웨이 해역에 투입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지금 한국과 일본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구조가 어떻게 완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미국자체 내부의 노선으로선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우리 평화운동에 있어서 이 반전의 문제가 전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서는 신데짱트의 분위기를 한반도의 안정과 직결시켜 생각하고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저의 판단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② (정해구氏)

저는 이해영氏의 발제에 대해서 한가지 정도를 첨가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나서 한두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발제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되어 있지만 요즘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라는 말이 가지는 사적의미에 대해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통일에 대한 모든 의견을 정부에서 수렴해서 창구를 일원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허위성을 가지고 있는가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남한같은 경우, 정부당국과 민중과의 괴리가 단정수립이후 계속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남한에서는 기본적으로 분단체력이 단정수립에 참여를 하였고 분단을 반대했던 통일지향 세력들이 단정에 반대했던 형태로 국가가 수립이 되면서 사실상 통일지향세력은 정부권력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따라서 그뒤의 역대 정권들은 분단체력의 맥을 잇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당국이 내놓은 통일정책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분단체력이 통일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당국 즉, 분단체력이 통일정책을 얘기하는 그자체가 허위이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당국과,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는 민중 사이에는 항상 그런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남북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도 정당사회단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민중들의 통일운동에 있어서 정당사회단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를 역사적으로 몇가지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15해방후에 모스크바 3

상회의에서 한국문제에 관해 결정하기를, 미·소공위의 합의에 의해 국내의 정당사회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임시정부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당·사회단체라는 것이 국가수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당사회단체의 범위를 둘러싸고 1, 2차 미소공위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좌익세력들은 민주주의민족전선, 즉 민전을 결정하는데, 그것의 기본적인 내용은 진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각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전부 모여 국가권력의 하나의 맹아체를 만드는 그런 의미 즉 다시 얘기하면, 모든 민중들을 대변하는 그런 국가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정당과 민중대변의 사회단체들을 모아가고 그것이 국가권력수립의 하나의 토대가 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당사회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것은 남북협상때 부터인데, (48년에 있었던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와 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를 합쳐서 통상 남북협상이라고 합니다) 이 남북협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 제기되었던 단정수립을 반대하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의 전 정당과 전 사회단체가 단정반대의 뜻을 전국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또는 대표자연석회의 또는 지도자협의회 (특히, 자주적 국가수립방안을 의논했음) 등의 역사적 의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이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전술적인 의미에서 정부당국과 대화를 하기 싫으니까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남한의 정부당국이 분단세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실제로 통일을 하려면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들을 대표하는 정당사회단체들과 대화를 하자는 전제가 역사적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데탕트의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국내에 진정한 민중통일주체세력이 없을 때에는 정부당국이 이를 이용해 유신체제 성립의 계기로 만들어버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 이후부터는 정부당국과의 대화는 가능한 한 회피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한에서 진정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사회단체들과 같이 만나서 연석회의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의미를 인식한 다음에 우리모두에게 과제로 대두되는 것은, 남한에서 정부당국이 통일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입니다. 이 기구를 형성하는 문제야말로 바로 민중들의 기반위에 정당·사회단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일적인 조직, 즉 통일전선적인 조직을 형성해서 거기서 통일주체세력에 대한 통일된 통일의 견해를 제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단계에 있어서 정부당국이 통일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통일의 주체를 조직적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지금의 진보적, 민주적 정당·사회단체들이 해야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해영씨에게 두가지 정도를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한에서의 통일정책이라고 한다면 - 정부당국의 통일정책이 되겠는데 - 처음에는 자기네들끼리 단정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는 이승만 정권에서 북진통일, 그 다음에 그 공화국 당시에는 UN감시하에 총선거를 통한 통일, 그후 박정희 당시에는 선전선 후통일 등으로 얘기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통일정책

속에 면면히 흐르는 맥은 일단 통일을 뒤로 미루든지, 현실적인 통일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 7.4공동성명 이후 73년 6.23선언부터는 2개의 한국정책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주로 남북한 UN동시가입 이라든가 국제정치적인 수준에서의 남북한 상호공동승인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2개의 한국정책이 수행됩니다. 여기에 비해 80년대에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7.7선언' 등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70년대에 2개의 한국 정책과 80년대의 2개의 한국정책이 기본적인 본질은 같지만 그것을 전술적으로 표현하는 양식이라든지 대응양태는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 특히 7.7선언의 내용은 현상적으로 파악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따라서 이 7.7선언의 현상과 본질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갖느냐라는 점에서 발제자가 추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발제자께서 북한에 대해 '사회주의적 전방초소'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를 잘못 이해하면 남한은 자본주의,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이분법적 개념으로 생각할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 자체가 민족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따라서 형용사를 굳이 붙인다면 '민족적 사회주의'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족적인 성격이 북한의 통일정책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② (이해영氏)

; 맨 처음 지적하신 것처럼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의 역사적 의의는 대단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고, 북한이 생각하기에는 남한의 정권이 민중들의 아래로부터의 통일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전혀 대변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대변한다 하더라도 37%밖에 대변하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남한 내부에서 민중들의 이런 제반요구들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조직, 나아가서 통일전선과 같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남북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은 자의적이지만 70년대 미국에 의한 분단체제의 국제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70년대와 80년대는 질적 차별성을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기구분을 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70년대 초반의 'two Korea' 정책, 즉 분단영구화정책이 미국과 영국 내지 일본에서 서서히 문제제기가 되었고 그것이 최초로 공식화된 것이 75년 9월의 키신저의 UN연설에서였습니다. 그후 한반도 문제 주도권의 미국장악이 전면에서 드러나면서 분단을 고착화시켜 내기 위한 방안들이 서서히 남한 정권의 정책속에서 (예를들어, 전두환이 얘기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 다시금 완전하게 관철되고 있습니다. 일단 통일정책의 견지에서 볼 때 70,80년대는 그 관철의 수준과 폭 정도에 있어서 보다 강화된 것들이 남한 정부의 정책을 이루고 있는 것 같고, 최근의 7.7선언 같은 것은 80년대 초반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보다 세련된, 보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응용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7.7선언이 갖고 있는 허구성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노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적·개량적 성격들이 통일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가장 기만적인 각개 조항을 다 검토해 볼 수는 없었지만 7.7선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교차승인의 전 단계인 교차접촉을 보다 드러내 놓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한 정권의 교차접촉의 공식 입장화는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보다 더욱 드러내놓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미국 등은 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그에 따라서, 일정하게 조성되고 있는 신데방트 국면에 조용해서 중국이나 소련 역시 영거주출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7.7선언이 가지고 있는 기만성부분을 느낄 수 있는 근거는 가령 7.4공동성명이 발표된 그날 이후 아래로부터의 자주적 평화통일운동이 거세어짐에 따라 이를 좌경, 용공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단적인 증거로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극우파문건이 정부에 의해 국가예산으로 전국에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면 내지 'two Korea'의 성격변화에 대해서는, 그러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특히 올림픽을 전후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사회주의를 National Socialism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저는 National Socialism과 Nationalistic Socialism을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Nationalistic Socialism이 아닌 National Socialism으로 북한을 이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더욱더 정확한 표현은 애국적 사회주의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민족의 문제들이 통일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6차 당대회에서 사상·제도, 혹은 이념의 차이보다 민족의 문제를 먼저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물론, 북한의 통일정책도 해방이후부터 일정하게 변화되는 역사적 경로를 밟고 있는데, 그것을 남한에서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년대의 3자회담 같은 것은 북한이 협상을 하겠다는 신호를 남한에 보냈는데, 이것 역시 남한 정권측에 의해 무시되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변화의 과정도, 역사적 과정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북한쪽의 통일정책이 민족적 가치를 사상적 또는 계급적가치보다 명백히 앞세웠던 것은 분명한 문서 또는 사례들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③ (정민氏)

; 이승환씨의 발제에서는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 특히 2가지 문제는 이런 주제를 다뤘던 다른 내용들과는 조금 특이한 내용이 있겠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통일문제의 국제적 관련성을 주로 통일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정세, 그리고 그 조건들의 측면에서만 파악했었는데 이 발제에서는 우리가 통일운동을 하는 국제적 의의, 그 적극적 의의를 정리함으로써 통일문제를 세계운동적 차원으로 일정정도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평화문제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단편적으로는 많이 제시가 되어왔지만, 여기서는 평화문제를 철저히 체제·제도의 문제로 놓고, 같은 자본주의 국가라 하더

라도 제국주의 진영내에서의 위치에 의해서 평화문제의 성격을 각각 구분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국주의 국가에 있어서 평화문제는 반독점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거라고 한다면,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의 평화문제는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에 관계해서 질문하기 보다는 주로 여기서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몇가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통일문제의 세계변혁적 관련성을 얘기한다 했을때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운동의 범주가 국제연대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통일문제 또는 민족자주화 운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국제연대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 발제문 중에서도 계속 드러나는 것인데, 용어의 혼동문제입니다. 여기서는 한반도 통일과 조국통일이라는 것이 같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말고도 통일에 대한 용어으로써 국토통일이라든가 민족통일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 4가지 개념들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 어떤 개념이 가장 적합한가를 가려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여기서는 상당부분이 조국통일의 내용, 그리고 조건들을 얘기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 구체적으로 조국통일 운동이라는 것이 운동의 현실적 제조건중에서 진행된다고 했을때 특히 우리 운동의 상황은 조직동의 배치가 민족해방운동에 적합하게 되어있지 않고 상당부분이 어떤 그 이전에 부문운동별 중심으로 편제가 되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운동의 현실적 상황 속에서 조국통일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③ (이승환氏)

; 우선 개념부터 말하겠습니다. 본인이 용어를 혼용했던 것 같습니다. 「조국통일」, 「국토통일」 등은 모두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국통일」은 영토에 관한 문제인데 잘못하면 신라·고구려·백제의 영토를 누가 갖느냐는 식의 의미를 지닐 수 있어, 국토통일원이란 이름도 마찬가지로 침략적인, 제국적인 성격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민족통일」의 정확한 개념은 근대 민족국가의 완성입니다. 이는 부르조아혁명 단계에서 민족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또는 여러 다양한 민족의 통합성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역시 맞지않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가장 올바른 개념은 「조국통일」입니다. 이는 민족적 자주성을 억압당하고 국토의 반이 외세에 강점당해 있는 상태를 극복하자는 의미로서 즉, 영어로 쓰자면 unification이 아닌 reunification의 의미입니다.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개념을 계속 사용했던 이유는 첫째, '세계대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조국을 어떻게 지칭하는 것이 가장 옳은가에 대한 대단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두번째로, 우리나라의 통일운동은 기본적으로 변혁운동이며 민족해방운동이

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제기조상 중립적 개념을 쓸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을 사과드리고 그 문제제기를 받아들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연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국제연대라는 말에 대해서 공산주의 운동에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말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점에서 국제연대는 변혁운동적 관점에서 볼때 세계혁명과 관련해서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연대가 특히 중요하게 되는 이유가 두가지 있는데 하나는 제국주의 진영, 반동적 진영 등이 한·미·일, 미·서유럽, 미·아시아 등등의 모습으로 국제적인 반동의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 정보나 지배통치공작 자체가 세계적 규모로 발전하고 있기때문에 실제로 한 나라의 변혁운동을 담당해야 할 민중세력에 있어서 연합해가는 국제반동세력에 대항하여 한 국가의 미약한 힘만으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 대두되면서 세계적인 반제역랑과의 연대가 중요한 과제로 되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국제연대가 갖는 의의는 오늘날 제국주의가 신식민지 혹은 3대 진보세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각개격파전략을 수행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연쇄고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의 이같은 공격을 막아내고 제국주의를 격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국주의 연대의 약한고리를 끊어내는 전술적 방도로서 국제연대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국제연대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두가지 의의는 우리나라의 조국통일운동, 민족해방운동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3대진보세력중 혁명을 이미 달성한 나라와의 연대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신식민지적 성격을 봐서는 도리어 제국주의 지배체제 내의 민중들과의 연대라는 것이 실제로 국제연대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환언하자면 우리나라 조국통일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한·미·일 3국 민중간의 연대가 매우 중요한 전략적 혹은 전술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3국 민중간의 참된 연대는 제국주의 세력과 군부독재 세력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들의 비도덕성, 반혁명성을 국제적으로 폭로하는데 있어 유리한 조건들을 형성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이 전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세력에게 강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연대에 있어서 그간 우리운동내부에 있었던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일각에서 비반미의 입장에서 서서 국제연대의 차원자체를 온정주의적으로 대국주의적이고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시혜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극히 비주체적으로 국제연대운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며, 이에 대해선 우리가 명백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연대운동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통일과 변혁을 달성한 힘은 우리민중에게 있다는 주체적 입장을 견지할 때에만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특히 그간의 미국, 일본등의 민중과의 연대 즉, 일·한, 미·한 연대에 있어서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즉, 미·일이 식민사관을 철저히 극복하며 그간 자신들이 한반도에서 저질렀던 엄청난 범죄적 작태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고 한반도 민족해방운동의 본성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지 못한채, 식민주의적 잔영을 깊이 남기고 있는 온정주의, 대국주의 예를 들면 민주화되지 않은 한국에 대해서 선심쓰는 듯한(연대적) 자세가 바로 그것

이며, 이것은 감옥에 들어가면 상을 주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대는 한국민중의 해방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전혀 의미가 없는 연대입니다. 실제로 한·미·일 민중간의 참된 연대가 되기 위해서는 침략과 지배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한국민중의 고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제연대운동은 한국민중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한·미·일 민중간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반핵평화와 군부독재의 테러통치타도 그리고 미국의 친미독재에 대한 후원증지를 중심이유로 싸울때, 그것이 우리나라 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의 발전에 대단히 큰 도움을 줄거라고 봅니다. 특히 한·미·일 민중간의 연대는 역사적으로 지배·피지배 관계에 있던 나라간의 모범적 연대라는 상징적 선례를 만들어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한·미·일의 국제연대가 한국민중해방운동을 도와주는 것뿐 아니라 반대로 도움을 받는 측면도 클것이라고 보는것인데, 이는 미·일의 운동이 갖는 소자산가적 반계급적 성격, 생태학주의적 성격 등 역사적·계급적 본질을 도의시한 상황이 한국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사상·이론·높은 투쟁력을 접하게 되면서 극복되어지고 그럼으로써 미·일 민중이 자기나라에서 반독점 민주화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배울점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저역시 매우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일운동, 민족해방운동에 적합한 형태로 우리운동의 역량 편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남북민중간의 민족대단결의 조직적 형태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간 우리운동은 부문운동의 구분조차도 불명확했으나 이제는 계급·계층적 기반이 확실한 부문운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한국내 민족민주세력이 어떻게 독자적인 세를 형성하고 형태를 꾸릴것인가와 본질적으로 관련된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간 나타났던 분열은 이제 어느정도 극복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올림픽 이후의 정세, 그리고 8.15회담, 세계대회, 범민족대회의 전개속에서 통일과 단결이 새로이 진전되리라고 생각하며 미약하나마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종합토론 —

이인영氏; 저는 그간 우리의 통일운동을 반성하면서 구체적으로 통일운동의 주체형성의 문제와 통일민주국가에 있어서 이후 구체적인 모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의 통일논의가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머물고 과학적 통일운동의 차원으로 전개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일운동의 주체형성의 문제 즉 남한에 있어서의 통일운동의 주체와 북한에 있어서의 통일운동의 주체와의 결합의 방식(핵심적인 관계의 설정)이 규명되어야 하고, 둘째, 막연히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통일민주국가의 형태를 인식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전의지를 모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번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까 정해구氏께서 남북정당·계 사회단체 연석회의의 역사적 성격규명을 얘기하시면서, 해방직후 민전이 가지는 남한 내에 있어서 단독 정부수립을 반대하고 민족통일을 일으키기위한 민주주체형성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모습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해방 직후에 있어서의 조건과 현재에 있어서의 조건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직후에는 일정정도 이데올로기적인 중립의 시기가 가능했었으나, 그 이후 44년간은 분단고착화의 과정속에서 내심으로는 인정하고 존중해줄 수 있을지라도 반공이데올로기 내지는 보수 극우 이데올로기 외에는 현 실태로서 나타나는 것이 철저히 봉쇄돼 왔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의 주체로서 통일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인, 사상적인 것을 초월해서 민족적인 대단결과 화해로부터 출발하는 통일운동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런것들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민간주체 내지 민주주체들로서 통일운동의 주체를 형성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얘기되었지만 한반도에 있어서 통일운동은 근본적으로 반미·반독재 투쟁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간 우리들이 반미·반독재 투쟁의 과정에서 혁혁한 민족적 역량과 또한 이속에서 투쟁주체들을 일정정도 축적해내고 꾸려냈다는 측면에서 봤을때, 이제는 어떻게 이 남한의 통일주체와 북한의 통일주체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관계설정을 해 들어가야 할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모습들로는 군부독재의 장기 통치과정에서 조각되어진 통역당·인혁당·남민전사건에서 밖에 별로 찾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단체들이 설정했던 북한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간에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의 관계설정 이었다는데 일단의 의의가 있을수 있으나 이들이 대중적인 합법성과 대중적 기반을 결여함으로 인해 오히려 북한에 있어서의 통일운동주체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많은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류를 딛고 현 88년 상반기 통일운동에 있어서 일정정도 학생운동에서 북한과 직접적인 내지 간접적인 관계설정을 시도했던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운동이 상반기 조국통일축전 투쟁 과정에 있어서 '전체 4천만 남한국민을 포괄하는 대중적·전계급적·전계층적 힘으로써의 통일운동 전개'라는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취약한 고리들을 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이라는 하나의 계층대중자체 속에서 북한의 청년학생과의 결합방식에 있어서 그것이 대중적 기반을 가지면서 합법적인 의의를 쟁취해 냈었다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남한의 청년학도들이 북한의 청년학도들에게 현실적으로 체감되어가는 통일운동과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절절히 호소하면서 남한의 청년학도와 북한의 청년학도가 만나자는 제안을 공개서한의 형태로 발송하고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어 북한의 청년학도들이 회답을 해오고 또한 이것이 실질적인 만남의 과정으로 되기위해 상호간에 노력을 해보고 하는, 이러한 방식들은 현재 우리 남북한 통일운동 주체들이 접촉하고 그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즉, 학생전체의 동의를 얻고 대

중적 기반을 획득하여 전개했던, 그리고 북한 통일세력과의 접촉과 직간접적인 관계설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은, 전민족적인 차원에서의 남한내 민주운동세력과 북한 민중간의 접촉에 있어서 현재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민족국가의 구체적 형태로서 대체로 연방국가의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연방국가 모델의 제시에 있어서 그 출발점은,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부정하는데서부터 출발하는 남한정권 차원에서의 통일민족국가 모델에 대한 발상과 접근은 필연적으로 체제와 체제의 대결과 충돌로써 즉, 쉽게 여기해서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전쟁과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멸망으로까지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부터 -남한정권의 그러한 발상자체를 지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연방국가의 형태가 어떠한 이유에서 제시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44년의 분단과정에 있어서 각 체제의 이념과 사상, 체제간의 이질화와 그 심각성은 이것들을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절박성 이런 차원에서 현실적통일 문제를 접근시켜 나가지 않는한 대결과 충돌로 끝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또한 전쟁과 민족멸망으로 밖에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상·이념·정파를 초월한 민족대단결·조국통일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일국가로의 방도를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각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존중하는 차원에서 통일된 민족국가의 형태들을 찾아나가는 것은 1민족·1국가·2개의 체제라는 연방국가 형태로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이러한 조국통일의 과정들이 무력의 충돌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일민족국가의 구체적인 형태와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했을때, 먼저 그 속에 존재하는 7천만 민중들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식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한에서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이라는 남한 민중들의 공포감, 그리고 남한식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내의 수많은 민중들이 죽어가야 할 것이라는 북한 민중들의 두려움들이 실질적으로 통일민족국가를 형성하는데 대단히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참여해야할 7천만 민중의 자주성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적 방도 자체를 확실히 밝히고 그것이 민중·민족에게 다가갔을때 각 개개인이 통일민족국가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자신의 모든 열과 성의로써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대단히 넓어질 것입니다. 세번째로, 현재의 각 체제를 존중하지 않고 한 체제를 흡수·통일하려는 발상자체는 기존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45년이후 나름대로 각기 형성해 온 민족의 역사적 성과를 깡그리 없애버리면서 각각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파탄을 초래할 것이고 이런과정은 조국통일이라는 것이 7천만 전체민중의 복된나날과 보다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의 고통으로밖에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가지 요인에 의해 현실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피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서 통일민족국가의 모델들을 찾는다고 했을때 연방국가만이 유일한 현실적 통일방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익환선생님 ; 통일된 조국의 모습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비약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통일조국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비약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요사이 '우리가 원점에 돌아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통일운동을 하다보니까 외세를 업은 독재자의 저항에 딱 부딪혀서 '우리가 해야 할일은 외세를 업은 독재자를 깨는 민주화투쟁에 전력을 투구하지 않으면 안될 자리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7.4 공동성명의 3대 원칙에 '민주'를 하나 더해서 4대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민중해방을 내용으로 해야한다는 조건을 달고 싶습니다. 따라서 민중이 주체가 되는 통일운동,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화운동이며, 그렇게 될 때 통일조국에서 민중이 역사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면에서 얘기할 때 "연방제"가 자주 등장하는데 저는 연방제를 두가지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통일에 이르기 위한 과도기적인 제도로서의 연방제입니다. 1민족 1국가 2체제는 사실은 아직 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제는 과도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측면에서 연방제를 단순히 과도기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제라고 본다면 북쪽은 공산주의체제 속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고 남쪽은 남쪽대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사회에서는 체제·제도·정책같은 것이 민중의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이고 우리 통일운동의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박순경 선생님 ; 발표된 발제문들이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거의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발제씩 별도로 철저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발제에 있어서는 휴전협정의 상황·분석, 그리고 평화협정의 필요성 등을 별도로 취급해야 될 것 같고, 협정에 위배되는 남한의 군사체제, 팀 스피리트훈련, 핵무기 배치 등의 휴전협정 위반사례를 좀 더 분석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또, 두번째 발제에 있어 역사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역사문제 분석만이 아니라 분단상황 극복을 위한 우리 운동의 방향이 아울러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발제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새로운 문제, 즉 국제연대문제, 이것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하는 큰 과제가 우리앞에 제기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고문으로 있는, 그리고 오늘의 이 대회를 제안한 평화연구소에 특히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연대를 형성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서구의 반전반핵운동이 서구 혹은 미국의 지배체제, 제3세계의 고난 특히 한민족의 분단상황과는 무관하게 전개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분단이 세계 한구석의 문제이지만 이곳에 세계문제의 압명어리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평화통일운동이 세계사의 새로운 지표가 된다는 것은 세번째 발제에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겹해서 연방제 문제가 논의되어 왔는데 제시된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를 방법적으로 어떻게 공식화해야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통일논의가 학생단체, 청년단체, 민간단체대로 전개가 되어 왔는데 앞으로 통일논의의 일관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들이 연대운동을 전개해야하는가가 강구돼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운동, 통일논의의 인식에 있어서 커다란 장벽은 정부주도하에 국민의 의식이 오도당하고있는 것입니다. 학생운동을 주요 타겟트로해서 나오는 '통일운동, 통일논의가 좌경이다' 라는 식의 논리는, 물론 한·미·일의 잘못된 반공·군사국제체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꾸준한 계몽·교육활동속에서 민족주체, 민중해방을 수립하는 통일운동이 세계의 이분화된 상황을 사상적, 운동적으로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저는, 남한 기독교가 얼마나 복음을 왜곡시켜 왔으며, 또 한반도에서의 미국위주선교가 얼마나 반민중적이었던가를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번째 발제자께서 기독교의 잘못된 국제연대를 신랄히 비판한데 대해 동의합니다. 기독교의 통일운동은 종전의 한·미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여론을 조장합니다. 한반도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군사독재정권, 반동세력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는 것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운동은 상당히 이런 모습들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기독교계의 나름대로의 노력에 대해 격려를 보내고 그들이 앞으로 통일운동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애정어린 비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화연구소가 할 일이 참으로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몇가지만 지적하더라도 국제간 연대관계를 수립하고 국내에 있어서도 연대운동을 전개하고 통일논의를 수립해서 분명한 노선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등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홍구氏 ; 저는 통일운동과 민중운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작년이후 올해 들어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통일의 주체가 7천만 민중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체 민족운동, 특히 노동운동 내부에서는 반드시 민족이나 민중이 아니라 노동계급이라는 계급운동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족을 강조하는 것이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편향이 아니라, 그래서 변혁운동이 올바르게 지향해 나가야 할 계급적 입장을 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섞인 비판을 해 주셨고 그 이면에는 논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통일문제 자체가 하루벌어 하루 먹는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얼마나 올바른 선전을 해왔는가 하는 점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통일문제 제기나 헌신적인 투쟁에 대해서도 가령 광주문제·5공비리 문제·민중 생존권 문제들이 뒤로 물리게 되는 것, 그리고 올림픽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올림픽 문제만 전면에 나서고 도시빈민 철거, 생존권 문제등이 부각되지 못하는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며 비판해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발제에서도 이야기 되었듯이 통일문제의 주체는 비단 청년학도만이 아니라 노동자·농민·도시빈

민·지식인·청년학생·민족자본가·양심적 종교인·애국적 군인에 이르기까지 조금이라도 민족의 문제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망라되는 광범위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통일문제가 여태까지 때론, 의제에 의해서 범민중·범민족적인 문제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지 6.10회담의 경우에서도 보이듯이 거의 청년학도들이 이 문제들을 떠맡아 왔습니다.

실상 4.19당시 통일문제가 잠시 반짝했다가 인혁당이나 통혁당사건을 거치면서 지식인들이 통일문제에 대해선 한발짝 물러서기 시작하고 민주 또는 자유민주의 영역으로 후퇴해 버렸습니다. 통일문제, 민족문제를 얘기하면 그들에 대한 탄압이 사형, 무기형 등으로 대단히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통일운동, 민중운동이 제국주의의 이 땅에 대한 지배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운동을 전면적으로 제기하면서 분단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의 선봉에서는 청년학도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문제가 청년학도에게만 미루어진다면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문제 자체가 청년학도내에서 일반화되는 과정에서도 조성만 열사의 투신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조성만 열사의 투신이 없었던들 김중기 학생의 선도적 통일문제 제기도 뒤로 밀리고 공동올림픽문제도 전면에서 제기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나 그런것들이 선도적인 투쟁에 의해 그 영역이 넓혀지면서 이제는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의 핵심에서 그 자리를 물려줄 수 없을만큼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년학도만의 운동이 아니라 전체민중의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문제자체가 전체민중의 일상적 삶과 연결되어 와 닿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문태 선생님; 저는 어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주최로 열린 광주집회에 참석하여 망월동 묘에 다녀왔는데 그 무덤앞에 엎드리니까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제가 소위 반핵평화운동을 조금이라도 효과있게 했다면 젊은 사람들이 그토록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고하면, 전두환 전대통령이나 지금의 소위 보통사람이 그 많은 동족을 비참하게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자기힘이 아니고 뒤에 어떤 배경, 즉, 미국의 군대와 무기, 그것도 보통무기가 아닌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어찌 그리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통일로 한 발 한발 가기 위해서는 주한 미군철수와 핵무기 반대를 확실히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룡산에는 국립공원을 파헤쳐서 필리핀의 핵을 들여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Team Spirit를 방위용 훈련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작년부터 공격훈련이 증가되고, 게다가 한국미사일 부대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통일을 향해 진군하자면 우선 핵반대운동부터 전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낙중 선생님; 대체로 1민족 1국가 2체제라는, 통일된 국가의 내용에 대해서 거의 이의가 없는데 저는 1민족 1연방국가 1체제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민족 1국가 2체제는 정치·경제적 현 체제를 그대로 둔다는 것이 전제로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남쪽의 경우 군사독재체제·금권독재체제·반공체제·공산당불법화체제를 그대로 놔두자는 것이고 북쪽의 경우는 1당독재체제·김일성유일체제를 놔두고 1국가로 하자는 얘기가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말하면 남한의 매관적·식민지적 경제체제를 그냥 놔두자는 얘기고, 북한의 국유, 국영의 관료적 경제체제, 즉, 생산력 발전에 지장이 있는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1국가로 하자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경제적으로 모두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놓고 1민족 1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약간 이해가 안갑니다.

정민氏; 김낙중 선생님의 말씀에는 약간 오해가 있는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의 평화 공존을 얘기한다고 했을때, 소련이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항상 자본주의 식으로만 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북한에서 얘기하는 고려연방공화제의 핵심은 남한민중이 자본주의 식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에서는 무력으로 통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다시 말해서 평화공존의 민족내적인 적용이라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식민지체제를 타파하는 것은 남한 민중의 할 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1국가 2체제의 한 체제는 북한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 점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박효성氏; 우리가 지금까지 소망과 미래의 형태를 말했는데, 현재의 싸움의 방도에 대해서는 얘기 못한 것이 이 세미나의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현 집권세력의 의도가 올림픽 이후, 진보세력을 좌경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아주 강하게 예상되어,식자전 유력자전 말을 안하러합니다. 88까지만 국민들을 자제시키고, 그 이후 민족민주운동세력을 용공으로 몰아 살 길을 찾으려 하는 저들의 흥계에 대한 대책을 미리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이 좋았겠는데 그것이 문제로만 제기되었을 뿐 실제 싸움의 대책이 없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존경하는 진보운동의 지도자들을 일으키고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선 우리가 국민을 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가장 가능성있는 투쟁이 5공비리, 광주학살의 문제로서, 이것이 국민과 공유하기 쉬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 가을에는 야당과 연대해서 국민이 정말 원하는 광주학살, 5공비리의 해결을 위해 투쟁하여 국민들이 운동권세력을 마음속으로부터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때 만이 국민을 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홍규氏; 저는, 남북간의 군사관계에 대한 발표중 정부측 발표와 이영희 교수님 발표가 각기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를 가진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측 자료는 영국의 전략문제연구소 자료를 보통 신문에 낼때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 중 특히 수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제가 뽑아본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중립적인 자료들을 보면, 78년~85년 사이 유독 무기도입 현황에서 북한은 900기정도, 남한은 5,000기 이상을 각각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부분은 전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전략이 유독 무기체계를 통해서 수적·질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는것도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문제의 경우는 특히 남한이 북한 군사력의 65%라고 하는데, 구체적 예를 들자면 남한의 전차가 1,300대, 북한이 2,800대라고 하는데 보호력이나 화력에 있어 한국의 전차는 주로 60년대 이후 개발된 SK1형, M48-5형으로 대부분이 50년대 제품인 북한 전차보다 훨씬 앞섭니다. 또 전차가 이동하려면 수송로가 있어야 하는데 한반도 전체에서 그런 수송로는 6개가 있고 북한의 옵션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로 통하는 단거리 길과 철원·평강으로 통하는 길이 바로 그것이어서 그쪽으로 주력부대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문산방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방면에 한국군의 포병대 등 모든 배치된 물량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숫적으로 우위에 있다해도, 예를 들어 82년 남한의 대전차 미사일 1,800기의 도입, 그다음 600기 추가도입, 그리고 최근 채택한 북한에 대한 공지전 전략 등 남한의 화력은 상당히 강대합니다. 그리고 남한군의 전투기 등이 대부분 3,000이상, 6,000~7,000까지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데 비해 북한은 고작 500내지 1,000개 정도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비교를 볼때 남한정부가 인용하는 자료들의 허구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등, 이영희 교수가 인용하신 자료들을 보면 한반도의 양세력 중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균형을 깰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남한은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럴때에 군사적 긴장은 더욱 강화되고 또한 고도무기체계의 도입때문에 북한을 더욱 초조하게 강한 위기의식을 갖게하여, 소련에 대한 북한의 영공통과권 및 기항권의 수여 등 여태껏 하지않던 정책을 북한이 폐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이 매우 강화된 무기체계를 갖고 있으며, 또 증강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주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김광식氏 : 한신대 강사) 세미나를 정리하며.

; 고맙습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현재의 남북적대관계, 한미 우호 (지배-피지배) 관계를 남북우호관계, 한미 자주관계로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정리된 것 같으며, 그 과정의 문제로서는 대체로 발제자·토론자들이 1민족 1국가 2체제로 가야 한다는데 동의한 것 같습니다. 단, 이에 대해 김낙중 선생님은 그 체제가 민중이 잘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보다 진전된 1체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하셨고 문익환선생님은 체제의 문제를 보다 진전시키는 방향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용상으로 봤을때 충돌의 측면보다는 민족의 생존권이라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는 같다고 보이며, 이는 여태껏 토론의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주면서 우리에게 더많은 토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통일의 주체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남북한 민중을 기본으로 하여 해외동포, 해외 평화애호세력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어 휴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과 남북한 불가침선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주한미군과 핵이 철수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운동세력을 애국세력이 아닌 좌경세력으로 몰아 붙이려는 정부의 구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것, 그리하여 국가보안법 등 반민족적·반통일적 악법의 철폐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 역시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통일논의 및 창구 독점을 극복하고 자주적 민간교류를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고, 오늘의 논의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이땅의 분단극복을 위한 우리의 논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참가자 후기

한국정부의 압력을 극복, “싸워 얻은” 세계대회

1988. 9.8

(일본 아사히 신문 게재)

무토 이찌오

올림픽전야의 서울은 다시 경찰이 제압하는 거리였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전투경찰로 가득 채워진 버스들이 지켜 서 있었고, 골목으로 들어 서면 블루진 차림의 전투요원 부대가 길을 매우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현지의 신문에 의하면, 서울을 비롯한 18개 도시와 2천 3백 45개 마을이, 8월 17일 이래 일체의 대중행동이 금지되는 「평화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서울 「평화구역」에서 개최 —

평화구역 그 한 북판에서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가 한국의 민중운동 연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의 이시구로 토오치 대표 위원, 위 조직의 나가사키현민회의의 야마시타 히로부미 사무국원, 토마호크저지 전국운동의 우메바야시 히로미찌와 함께 저도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필리핀의 저명한 역사가 레나토 콘스탄티노씨, 같은 필리핀의 네포무세노주교, 서독 녹색당의 공식 대표 등과 그의 미국, 멕시코, 재미한국인운동의 대표 등 5개국 십수명이었습니다.

「세계대회가 열렸다」고 했지만, 정말은 문자 그대로 「싸워서 쟁취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운동가들이 「올림픽 공간」이라고 부르는 묘한 역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 속에서, 전두환시대와 같이 노골적인 탄압수법을 취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그다지 득책이 아닙니다. 한편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터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한계에 둘러싸인 「공간」의 최대 경계선에서 그 경계선을 밀어 열어젖히면서 세계대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정권측은 그와 같은 한계 속에서 이번 세계대회의 기도를 사실상 저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거친 수단을 취했습니다. 경찰은 개최식이 열리는 고려대학을 봉쇄했고 많은 참가자들을 힘으로 몰아

냈습니다. 28일의 최종대회가 열린 성균관대학은 수백의 전투경찰에 의해서 모든 문이 엄중히 봉쇄당해 우리들 외국대표들도 삼삼오오 「침투」함으로써 대회장에 가까스로 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국제세미나 외에, 한국인 원폭피폭자대회, 평화행진, 판문점에 가까운 임진각에서의 통일기원제, 장기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는 청주감호소 앞에서의 집회, 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광주에서의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대회일정으로 계획되었으나 많은 행사가 경찰에 의해 방해되고 저지되었습니다. 외국대표들은 건장한 사복형사들에게 미행당하고 때로는 둘러싸여 위협을 당하기도 했으며, 일본의 이시구로·야마시타 두분을 포함한 7명은 귀국직전에 연행되어 수사를 받았고 다섯명은 강제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대회는 열렸고 속행되어, 성균관대학의 땅거미가 내리는 잔디밭을 메운 천여명의 참가자들의 열기 속에서 선언문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정을 끝냈습니다. 주최자측 대표인 문익환목사는 「대회가 열린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했습니다.

— 반핵·평화가 통일운동과 결합 —

이번 세계대회가 한국의 운동에 있어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국민중운동의 일간지 「한겨레신문」은 이 대회가 「몇가지의 획기적인 내용」을 갖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는 「이번 대회가 작년 6월 민주화투쟁과 금년 청년학생들의 통일을 위한 운동을 계승하면서, 반전·반핵·반미로서의 평화운동을 재야운동권의 주요한 흐름으로 정착시킨 점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까지 「평화운동」이라는 운동영역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과는 달리, 「반핵」은 한국에 있어서는 극히 위험한 테마였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북」과의 군사대결을 국시로 해왔던 이 나라에 있어서, 그것은 국시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 민중의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바램인 민족통일의 과제가 민중운동의 중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반핵·평화」와 「조국의 재통일」이 결합한 것입니다. 문익환목사가 기조연설에서 외친 바와 같이 「분단은 냉전의 산물이며 핵기지는 통일의 최대의 장애이다」는 인식이 민중운동의 공통의 인식으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대회는 남북의 상호군축,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남북간 상호불가침선언 채택, 한국으로부터의 미군철수 및 핵기지 철거, 민중의 손에 의한 남북간 교류 등을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 뿌리를 뺏어가는 민중의 힘을 절감 —

「한겨레신문」은 또한 이번 대회를 「국내에 국한되어 있던 재야운동권이 국제연대의 발을 내딛은 최초의 경험으로서 기록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운동은 세계로부터 인적으로도 정보의 면에서도 봉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민족적 성격으로 인하여 운동이 한반도 중심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부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연대 속에서 쟁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대회는 한국의 민중운동에 있어서 미지의 사람들과 처음으로 공공연하게 만나는 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개최식에서는 우

때바야시씨가, 폐막식에서는 제가 짚막한 연대의 뜻을 전했는데 우렁찬 박수와 환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결코 의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과의 대치 속에서, 우리들은 거대한 민중의 힘이 뿌리를 뺏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극적인 정변을 가져왔던 작년 6월의 5백만 민중의 운동속에서 나타났던 바로 그 힘이었습니다. 그 힘은 선거 후의 운동의 분열과 재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이나라의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공간」이 소멸한 후, 권력과 이 민중의 힘 사이에 새로운 대결의 구도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대회가 선언한 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둘러싼 대결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武藤一洋 (무토 이찌요)

1931년 생. 동경대학 중퇴.

일본원수폭금지국민협의회, 재팬·프레스사를 거쳐 현재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 대표.

뉴욕주립대학 교원. 60년대 베트남평화를 위한 운동에 참가.

저서로 「근거지와 문화」 「일본국가의 가면을 벗긴다」 「정치적 창조력의 복권」 등이 있다.

세계대회에 대한 건설적 비판

1988. 8. 29.

Jürgen Maier

무엇보다도 먼저 저는 오늘날의 남한사회와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운동의 수행에 대해 이번 방문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나에게서는 글자 그대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직가들의 개별적인 움직임도 매우 강력한 것이었다고 이야기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용감한 것이었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확실히 서유럽 평화운동가와 녹색당원들 대부분의 개별적인 운동실천보다도 상당히 앞서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 남한은 내가 입국할 때보다 나갈 때 많은 의문점들을 남긴, 내가 방문했던 몇몇의 나라들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 말은 주로 통일

문제 등 장황하게 수식되고 긴 목표들을 달성하려는 운동의 정치적 경향성과 복잡성, 각각의 운동분파(혹은 전체)와 흐름의 정치적, 전략적 인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운동에 구체적인 정치적 단계들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나에게서는 매우 추상적인 인상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정말이지 많지만 한, 정당화된 이상주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나는 과연 북이 그들의 체제를 꽤 변화시켜야만 할 남으로부터 제기된 어떤 통일전략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그러한 구체적인 과정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토론에 대해서는 탄압이 있을 것이라는 상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남한의 국민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정치적, 전략적 접근 방식을 만들면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견해 속에서 남한사회가 정확히 어떻게 민주화와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이를 위해 북에는 무엇이 요구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말로 하면 아무리 그것이 감정적으로 매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여러분들이 내걸었던) 그 모든 훌륭한 긴 목표들이 단지 지나치게 모호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대회의 모든 속에서 나는 이것에 관해 진정한 답변을 얻지 못했으며 당신들의 기나긴 목표들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모호한 답이 남았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런 대회가 열린다면 그 점에 관해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며, 다소 같은(그리고 때때로는 나의 생각에 단순하기만 한) 많은 분석적 논문들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줄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대회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번 대회의 대부분의 진행자들이 무엇이 진정한 세계대회이며 그것이 왜 기본적으로 국내대회와 다른 것인지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들의 첫째 대회였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회에는 너무도 많은 비조직성이 보였으며 특별히 외국인 대표들이 대회의 진행과정에 동등하게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통역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3개국어로까지 이어지는 통역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시간 낭비이자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식의 진행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한도 작은 규모의 세미나에서는, 아무리 비싸도 동시통역이 있어야만 합니다. 최소한도 이번 대회에 수고하신 대부분의 통역가들보다는 훨씬 유창한 통역가들이 있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불행히도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제가 대회 집행부의 간사들과 대언론 홍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계)대회란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자들이 대회에 관한 기초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사무국에 영어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지 못하게 됐을 때, 이것은 하나의 세계대회나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에 매우 나쁜 것들이며 이로 인해 여러분들은 여론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불필요하게도 당신들의 성과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대회에서 발견한 정말 골치아픈 것은 나에게 부탁하신 발제문을 3주전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어로 된 자료조차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우리가 서울에 있는 동안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 의

국민들이 서울에서 즉흥적인 발제를 준비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대회의 잠재적인 그 많은 성과가 위와같은 조직성의 결여로 인해 소진된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불행히도 내가 서울에서 경찰에 연행된 이후 발표한 나의 기자회견문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그것도 도착하지 않았군요. 하지만 나는 최소한 나의 연행에 대한 대대적인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건설적인 제안들이 장래의 세계대회에 유용하게 참고가 되지길 바라며 남한정부가 점차 정치적 집회를 여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민주적 자유를 부정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많은 전문성 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해없이 세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행운을 빕니다.



남누리 북누리 하나되는 그날까지

작사 작곡 : 배정호

Am Em Am Dm G Em

어느 누가 이 을 건가 어느 누가 이 을 건 가 -
 그 누가 찾 을 건가 그 누가 찾 을 건 가 -

Am F Am G Em Am

남누리 북 - 누리 - 갈 라 진 우리 누 - 리 -
 남누리 북 - 누리 - 배 앓 기 우리 누 - 리 -

F G7 Am F Dm G G

우리 뻥 일 세 - 우리 뻥 일 세 -

E F Am G Em Am

이 땅 을 딛 고 살 우리 뻥 - 일 - 세 -

Am Em Am Dm G Em

함께 가 세 함 께 가 세 해 방 의 큰 춤 추 며 -

Am F Am G Em Am

남누리 북 - 누리 - 하나 되는 그 날 까 - 지 -
 남녘 땅 북 - 녘 땅 - 통일 되는 그 날 까 - 지 -